



2000년 이후 러시아 경제성장 요인 분석과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

정민현
민지영

2000년 이후 러시아 경제성장 요인 분석과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

정민현 · 민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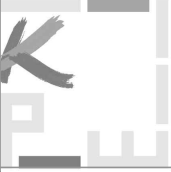
연구자료 19-03

2000년 이후 러시아 경제성장 요인 분석과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

인 쇄 2019년 6월 10일
발 행 2019년 6월 21일
발행인 이재영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주)유성사(02-837-0700)

©20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5,000원
ISBN 978-89-322-2460-2 94320
978-89-322-2064-2(세트)



국문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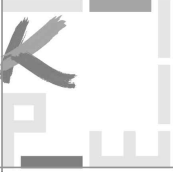
본고에서는 국면전환 추정(break-point estimation) 방법을 활용하여 2000~14년까지의 러시아 경제성장 국면을 2000~03년, 2004~07년, 그리고 2008~14년 세 시기로 구분한다. 그 후, 각 성장 국면의 주요 성장요인을 성장 회계(growth accounting) 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그리고 앞에서 식별한 성장 국면이 '생산성이 성장에 기여한 정도'에 의해 특징지어짐을 보인다.

러시아의 고도성장이 본격화된 첫 번째의 성장 국면(2000~03년)에서는 생산성 향상이 성장을 주도하지만 그 이후의 성장 국면부터 생산성 향상이 지체되어 자본축적이 성장을 주도한다. 이러한 성장 양태 변화를 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각각의 성장 국면별로 생산성에 영향을 끼친 정책과 경제적 사건을 중심으로 문헌 조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 성장 국면에서는 세계 개혁, 공공행정 투명화와 같은 제도 혁신이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두 번째 성장 국면부터는 민영기업의 광범위한 재국유화가 진행되는 등 연방정부가 자원을 직접 배분하는 행정 시스템이 도입되고 에너지산업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면서 생산성 향상이 지체되기 시작한다.

생산성이 기술 혁신 및 새로운 지식 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중·고부가가치 제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러시아의 산업구조를 분석한 결과, 두 번째 성장 국면부터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생산 및 수출 비중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에너지원의 수출 비중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생산성 결정요인으로서 제도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선진 기술 및 지식의 습득·이전·전파 등을 가로막는 국내의 '제도적 장벽(institutional barriers)'을 간단한 모형을 통해 소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의 제도적 장벽을 계산한 결과, 예상대로 생산성이 성장을 주도한 첫 번째 성장 국면의 제도적 장벽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두 번째 성장 국면부터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고에서는 지속성장을 위해 러시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제무역의 생산성 향상 효과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동적패널GMM(dynamic panel GMM) 방법을 활용하여, 러시아와 같은 중위소득국가가 제조업에 경쟁력이 있는 고소득국가와 상품 무역을 확대하거나 고소득국가로부터 상품 수입을 늘릴 경우 생산성의 성장률이 상승함을 보인다. 이러한 생산성 성장 효과는 중위소득국가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중위소득국가가 고소득국가로부터 상품 수입을 늘릴 경우 생산성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생산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상품 무역확대를 통해 △ 시장 경쟁 심화 △ 상품 시장 확대 △ 고품질 중간재의 다양화·저렴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차례

국문요약	3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주요 내용 요약	14
제2장 2000년 이후 러시아 경제성장과 경제정책 변화	18
1. 2000년 이후 러시아 경제성장 요약과 경제성장기의 구분	18
2. 1990년대 경기침체 이후 경기회복기(2000~03년)	23
3. 에너지 수출 확대에 의한 고도성장기(2004~08년)	26
4.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 모색기(2009년 이후)	32
제3장 러시아 경제성장요인 분석	43
1. 실증분석: 성장 회계	43
2. 러시아 경제 현황: 산업생산구조와 생산성을 중심으로	48
제4장 러시아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방안: 국제무역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중심으로	54
1. 국제무역과 경제성장의 관계: 선행연구 정리	54
2. 국제무역과 경제성장의 관계	56
3. 국제무역과 제조업 고도화의 관계	66
제5장 결론	72
1. 요약	72
2. 한·러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73

참고문헌 76

Executive Summary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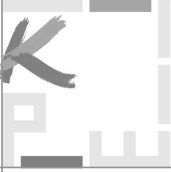


표 차례

표 2-1.	체제전환 이후 경기회복기(2000~03년)	25
표 2-2.	에너지 수출 확대에 의한 고도성장기(2004~08년)	27
표 2-3.	러시아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10대 기업	31
표 2-4.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 모색기(2009년 이후)	38
표 2-5.	서방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친 직간접적 충격: 부정적 충격을 중심으로	39
표 2-6.	수입대체정책 목표 산업	41
표 3-1.	러시아 경제의 성장 회계(2000~14년)	44
표 3-2.	성장 국면별 제도적 장벽 추이	53
표 4-1.	무역과 경제성장의 관계(전체 국가와의 무역)	60
표 4-2.	무역과 경제성장의 관계(고소득국가와의 상품 무역)	62
표 4-3.	무역과 TFP 성장의 관계(전체 국가와의 무역)	64
표 4-4.	무역과 TFP 성장의 관계(고소득국가와의 상품 무역)	66
표 4-5.	무역과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생산의 관계(전체 국가와의 무역)	69
표 4-6.	무역과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생산의 관계(고소득국가와의 상품 무역)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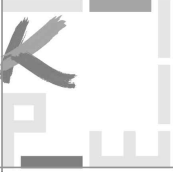


그림 차례

그림 2-1. 국제유가와 세계경제성장률	19
그림 2-2. 2000년 이후 러시아 경제성장 국면	20
그림 2-3. 러시아 정부 부채 추이(2000~17)	23
그림 2-4. 러시아 부패인식지수 추이(1996~2018)	23
그림 2-5. 러시아 무역 추이(2000~17)	28
그림 2-6. 러시아 FDI 추이(2000~17)	28
그림 2-7. 러시아 빈곤율(2000~17)	28
그림 2-8. 러시아 에너지 수출 추이(2000~16)	29
그림 2-9. 러시아 GDP 구조 변화(2003 vs. 2016)	29
그림 2-10. 러시아 효과환율 추이(2000~17)	30
그림 2-11. 러시아 실질임금상승률 및 소매거래증가율(2000~17)	30
그림 2-12. 부문별 성장률 추이(2003~16)	30
그림 2-13. EBRD 전환지수(2000 vs. 2008)	31
그림 2-14. 러시아 재할인율 추이(2000~12)	32
그림 2-15. 예산 기준 변화(2004~17)	32
그림 2-16. 자본유출 추이(2000~17)	34
그림 2-17. 러시아 외환보유고 추이(2000~17)	34
그림 2-18. 러시아 물가상승률과 환율 추이(2000~17)	34
그림 2-19. 러시아 기준금리 추이(2013~17)	34
그림 2-20. 러시아 재정균형과 정부지출 추이(2000~17)	35
그림 2-21. 러시아 국부펀드와 보유펀드 규모 추이(2008~17)	35
그림 2-22. 러시아 경제활동가능인구 및 실업률 추이(2000~17)	36
그림 2-23. 러시아 노동생산성 증가율(2000~17)	36
그림 2-24. 러시아 고정자본투자(2000~17)	36
그림 3-1.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생산 비중과 생산성의 상관관계	46
그림 3-2. 러시아 산업 생산 비중 추이(2000~14)	48

그림 3-3. 러시아 주요 수출 상품 비중 추이(2000~14) 48

그림 4-1. 소득,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생산 및 수출 비중 59



글상자 차례

글상자 2-1. 서방의 대러 제재로 인한 러시아 경제 충격과 대응정책
(2014년 이후) 3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 이후 러시아 경제성장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도출한 후, 이를 토대로 한국과의 상품 무역확대가 러시아 경제의 당면과제를 해소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미국, 일본 등의 선진 해양 경제와 중국에 대한 과중한 대외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정 국가군과의 무역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대외 경제구조를 다변화하여 나날이 높아지는 대외여건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대외경제정책의 새로운 판도에서 우리 정부도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증진을 꾀하고 있다. 유라시아 인접국들에 정치, 경제적 영향력이 클 뿐 아니라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이다. 실제로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이 최근 개시되는 등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이 대외정세의 급격한 변동에도 굳건히 지속되려면 협력의 상호 호혜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서 상호 호혜성이란 국제경제학 일반에서 흔히 거론되는 비교우위에서 비롯된 무역 쌍방의 경제적 이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무역확대가 무역 당사국 모두에 이득이 된다고 하여도 정치·사회·문화·역사적 맥락에서 자유 무역이 제한되는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한 예로, 최근의 미·중 통상 분쟁 역시 순수한 경제적 고려와는 별개의 정치적 동인이 배후에 존재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결국 이론이 아닌 현실의 관점에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현재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 문제가 한국과 경제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일정 부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국제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무역을 통한 경제적 이득만으로 현실에서의 경제협력 확대가 여의치 않을 경우, 협력 확대를 통해 그러한 이득 이외에 추가로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실익을 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실의 경제협력이 상호 호혜성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근본적 이유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러시아 및 한국의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한국과 서비스·투자를 넘어 상품까지 포함하는 FTA 체결에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제조업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상품 무역까지 개방할 경우 자국의 제조업이 성장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상품 무역까지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러시아 제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한국과 러시아 경제협력의 상호 호혜성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러시아 경제는 석유, 광물 등의 천연자원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제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다각화(diversification)가 절실한 시점이다. 단조로운 산업생산구조로 인해 원유의 국제가격과 같은 대외변수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취약한 경제 펀더멘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러시아는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산업구조 고도화(advancement)를 추진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초·중반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중진국(middle-income country) 문턱에 이미 들어섰기 때문이다.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으로 인해 성장이 어느

정도 실현된 시점부터는 단순 노동과 자본 투입만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경제발전 단계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이 필요하다. 이것은 기존에 의존해왔던 요소투입 성장 방식이 아닌 생산성(productivity) 향상을 통한 질적 성장(qualitative growth)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 경제구조의 혁신, 이른바 경제의 체질 개선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 혁신과 새로운 지식 개발이 핵심이 되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이 필요하다. 이는 생산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그 국가의 기술 수준이기 때문이다. 기술 수준은 곧 국가가 보유한 첨단 기술과 지식 자본에 비례하므로 고부가가치 제조업의 경쟁력이 강하다는 것은 곧 기술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생산성이 더 높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생산성 결정에 기술 수준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다른 요소가 있다. 바로 효율성(efficiency)이다. 효율성은 곧 한 국가가 보유한 경제적 자원(resource)을 어떻게 배분하는가의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을 의미한다. 배분적 효율성은 한 국가의 제도·문화와 같은 상부구조(superstructure)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경제주체의 경제 행위를 좌우하는 경제적 동기(incentive)가 제도와 문화에 크게 영향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창의적인 개인의 자발적인 기술 혁신 및 새로운 지식 개발을 기대하기 어렵다. 위험을 감수하고 비용을 들여 혁신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재산권보호가 취약하여 혁신의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면 혁신을 시도할 능력 있는 기업가(entrepreneur)의 출현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혁신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능력 있는 기업가가 혁신을 포기하고 그의 능력을 다른 일에 써야만 한다면 이는 그 기업가의 혁신 능력을 사회가 제대로 배분하지 못한 것이 된다.

상술한 것처럼 고부가가치 제조업의 핵심은 기술 혁신과 신지식의 개발이므

로, 이를 뒷받침할 경제적 동기가 보장되지 않는 제도적 환경에서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생산성 향상에 제약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도·문화를 아우르는 상부구조가 한 국가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변수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성장 측면에서 현재 러시아가 당면한 문제가 생산성 향상의 문제라는 것을 논증할 것이다. 즉 이미 중진국의 대열에 선 러시아가 지속성장을 달성하여 선진국의 대열에 오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질적 성장이라는 점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 후, 한국과 같이 제조업에 경쟁력이 있는 국가들과 상품 무역을 확대할 경우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됨을 데이터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앞에서 밝혔듯 생산성 향상은 주로 기술 수준과 제도의 질적 측면에서 결정된다. 이는 상품 무역확대가 기술 진보 및 새로운 지식 개발이 핵심이 되는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성장과 제도의 질적 개선에 도움이 됨을 의미한다.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 한국과 같이 제조업에 경쟁력이 있는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늘렸을 때 중·고부가가치 제조업(medium- and high-tech manufacturing)의 생산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결국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러시아와의 상품 무역확대는 무역구조 다변화를 꾀하는 우리나라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질적 성장이 필요한 러시아에도 이득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상품까지 포함하는 FTA의 상호 호혜성을 러시아와 객관적으로 논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주요 내용 요약

본론이 시작되는 제2장에서는 2000년 이후 러시아 경제성장 국면을 세 시기로 구분하여 각 국면의 주요 경제 사건과 정책을 알아본다. 관련 연구에서는

2000년, 2008년에 벌어진 경제위기와 이에 대응하는 경제정책 기초의 변화를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거나(박지원 2016a), 보다 통사적이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러시아의 집권층 및 올리가르히의 지배구조 변동을 기준으로 성장 국면에 대한 시기 구분을 시도한다(한종만 2012).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론에서 성장의 패턴을 식별할 때 주로 사용하는 국면 전환 추정(break-point estimation) 방법을 사용하여 러시아의 성장 국면을 구분한다. 이러한 통계적 방법론을 활용하는 것은 성장의 국면을 식별할 때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석에 따르면 2000~14년까지의 러시아 경제성장 국면은 2000~03년, 2004~07년, 그리고 2008~14년 세 시기로 구분된다. 데이터의 한계로 2015년 이후는 분석에서 제외되었지만 연구자에 따라 2015년 이후를 ‘제재 국면(sanction regime)’이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¹⁾

그런 다음 각 성장 국면의 주요 성장요인을 성장 회계(growth accounting) 방법을 통해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앞에서 식별한 성장 국면은 생산성이 성장에 기여한 정도가 각 국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러시아의 고도성장이 본격화된 첫 번째의 성장 국면(2000~03년)에서는 생산성 향상이 성장을 주도한 반면 그 이후의 성장 국면부터는 자본축적이 성장을 주도하게 된다. 결국 본 연구에서 2000년 이후의 러시아 경제성장을 시기별로 구분하는 기준은 생산성의 성장 기여도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질적 분석은 문헌 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즉 각 성장 국면의 주요 대외충격과 경제정책을 문헌 조사를 통해 살펴본다. 본 연구의 시기 구분은 생산성의 성장 기여도이므로 시기별로 생산성에 영향을 끼친 정책과 경제적 사건을 중심으로 각각의 성장 국면을 조망하였다.

제3장에서는 성장 회계 방법을 보다 면밀히 적용하여 2000년 이후 러시아

1)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2장 말미에 제재 국면이라는 이름으로 2015년 이후의 기간을 조망하는 문헌 조사를 수행한다.

경제성장을 수치적으로 파악하는 양적 분석을 진행한다. 그 후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모두 활용하여 현재 러시아가 직면한 중요한 경제 문제가 자원 부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며 이에 따른 과제가 산업구조의 다각화·고도화라는 결론을 얻는다.

한편 생산성 결정 요인으로서 제도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선진 기술 및 지식의 습득·이전·전파 등을 가로막는 국내의 '제도적 장벽(institutional barriers)'이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그런 다음 데이터를 활용하여 러시아의 제도적 장벽이 앞서 구분한 세 시기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예상대로 생산성이 성장을 주도한 첫 번째 성장 국면에서 제도적 장벽이 가장 낮은 반면 이후 성장 국면부터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질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무역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주목한다. 일반적으로 고소득국가는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생산 및 수출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간단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소득국가와 상품 무역을 확대하는 것은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 국가와 상품 무역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다음 실증분석을 통해 러시아와 같은 중위소득국가가 고소득국가와 상품 무역을 확대하거나 고소득국가로부터 상품 수입을 늘릴 경우 생산성의 성장률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장회귀(growth regression)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최소자승법(OLS)의 방법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동적패널GMM(dynamic panel GMM) 추정법을 활용할 것이다.

상품 무역확대가 어떠한 경로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고소득국가와의 상품 무역과 국내의 중·고부가가치 산업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다. 실증분석을 통해 고소득국가로부터 상품 수입을 늘릴 경우, 국내의 중·고부가가치 산업 생산 비중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상품 무역확대를 통해 △ 시장 경쟁 심화 △ 상품 시장 확대 △ 고품질의 중간재 다양화·저렴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5장에서는 앞 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고 대한민국과 러시아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며 연구를 마무리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재 중위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가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 고소득국가인 한국과 상품 무역을 확대하고 상품 수입을 늘릴 때, 러시아 국내의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이 촉진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는 한국과 러시아 간 상품 무역의 호혜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품 무역확대를 통해 한국은 수출구조 다변화를 꾀할 수 있고 러시아는 산업구조 다각화·고도화를 촉진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질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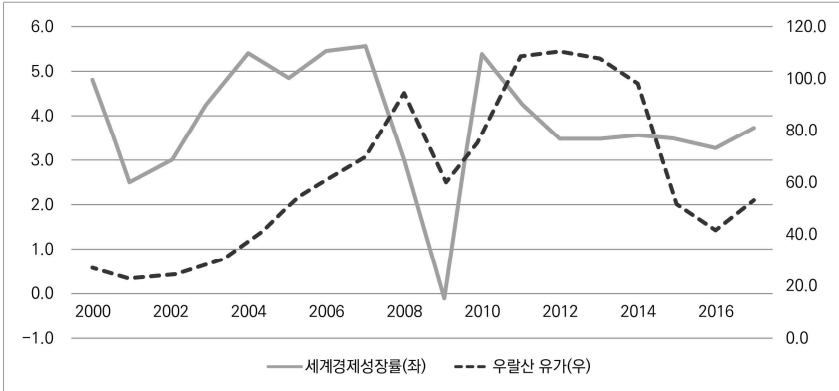
1. 2000년 이후 러시아 경제성장 요약과 경제성장기의 구분

2000년 이후 러시아 경제성장은 국제유가, 환율과 같은 대외요인이 큰 영향을 미쳤다. 2000~08년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은 연평균 7%에 달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2001년부터 신흥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가 호전되면서 석유와 같은 주요 에너지 자원의 국제 수요가 팽창, 국제유가가 빠르게 상승하였기 때문이다(그림 2-1 참고). 그러나 풍부한 자원 부존량은 러시아가 에너지원의 생산 및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결과를 야기하였고, 후에 서술하는 것처럼 산업구조의 다각화 및 선진화의 지연으로 생산성의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게 되었다.

에너지 자원에 의존하는 단조로운 산업구조는 러시아의 취약한 경제 펀더멘털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환율, 물가 등 러시아의 주요 집계변수는 국제유가와 같은 대외변수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신흥국의 환율이 평가 절하되면서, 러시아 경제는 2009년 명목 경제성장률이 -7.8%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글로벌 경기둔화가 장기화되고, 러시아 경제의 체질 개선이 지연되면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그림 2-1. 국제유가와 세계경제성장률

(단위: 배럴/달러, 전년동기대비 %)



자료: IMF, WEO; CEIC, OPEC spot crude oil price(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3. 14).

본 장에서는 2000년 이후 러시아 경제성장의 국면이 어떻게, 어떤 시점에서 전환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국면전환에 러시아 경제 당국이 어떠한 정책수단으로 대응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장 국면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구분하기 위해 Bai and Perron(1998, 2003)의 국면전환 추정(break-point estimation)을 사용하였다.²⁾ 해당 추정법의 요체는 주어진 시계열에서 임의로 정해진 국면 (T_1, T_2, \dots, T_m)마다 달라지는 시계열의 평균 성장률(mean growth rate)을 추정한 다음, 실제 시계열과 추정한 평균 성장률에 따른 시계열 간의 잔차(residual)를 최소화하는 국면 ($T_1^*, T_2^*, \dots, T_m^*$)을 식별하는 것이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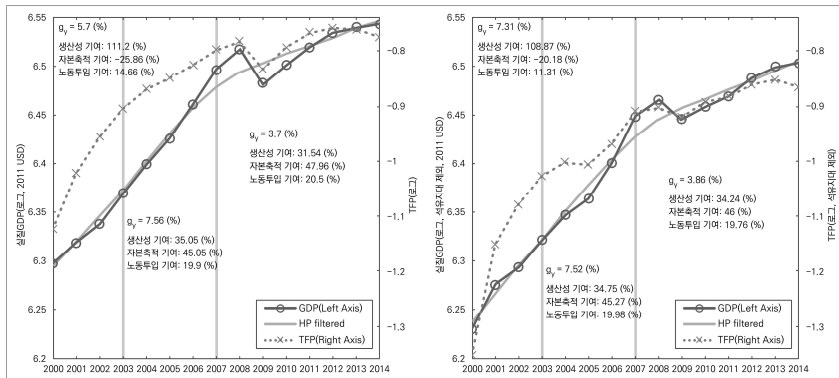
추정 결과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러시아의 경제성장은 2003년과 2007년에 걸쳐 두 번의 국면전환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2-2 왼쪽 패널 참고).⁴⁾ 첫

2) 경제성장, 특히 장기 경제성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장 국면의 전환(switching)에 대해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Jerzmanowski 2006). 이를 위해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Hausmann, Pritchett, and Rodrick(2005), Aizenman and Spiegel(2010) 등이 적용하고 있는 필터(filter)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국면(break-point)에 대한 통계적 추정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전자의 방법보다 후자의 방법이 국면에 대해 연구자가 상정하는 주관적 가정 및 기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3) 보다 상세한 해설과 응용을 위해서는 Kerekes(2011)와 Kar *et al.*(2013)을 참고할 수 있다.

번째 성장 국면은 2000~03년으로 PPP 기준 실질 GDP의 성장률이 연평균 5.7%에 달하는 ‘고도성장 국면(fast-growth regime)’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 국면은 2004~07년으로 해당 국면 동안 성장률이 더욱 높아져 연평균 7.6%에 달하는 매우 높은 성장률을 경험한다. 성장이 한층 가속된 ‘성장 가속 국면(growth-accelerated regime)’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마지막 국면은 2008~14년으로⁵⁾ 성장이 상대적으로 지체되는 기간이다. 연평균 성장률은 3.7%로서 성장 모멘텀이 낮아지는 ‘성장 감속 국면(growth-decelerated regime)’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2-2. 2000년 이후 러시아 경제성장 국면



자료: PWT 9.0(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3. 14)을 토대로 저자 작성.

- 4) 2000~14년 동안 전환점(break-point)의 개수 m 을 추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이중최대값검정(double maximum test)을 통해 $m = 0$ 의 귀무가설을 검증하였다. $m = 0$ 의 귀무가설이 기각된다면, 최적의 m 값을 찾기 위해 $\sup F_T(m + 1|m)$ 의 값이 1% 유의수준에서 m 이 $m + 1$ 보다 더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할 때까지 m 값을 하나씩 올려가며 추정을 계속하였다. 그 결과 $m = 2$ 가 최적임이 도출되었고, 본문과 같이 해당 기간에 총 3개의 국면을 추정하였다.
- 5) 가장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18년 대신 2014년으로 특정한 것은 데이터의 한계로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만 분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바로 아래에서 후술할 성장 회계 방정식을 사용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자본의 총량(total stock of capital) 데이터가 현재까지 가용한 데이터(PWT Ver. 9.0)로는 2014년까지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재 국면(sanction regime)’이라는 이름으로 2015년 이후의 기간을 조망하는 문헌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성장률의 양적 측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각각의 성장 국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성장을 달성하였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성장 감속 국면이 왜 나타났는지, 다시 말해 최근의 성장 지체 현상이 왜 도래하였는지 그 원인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제3장에서 자세히 서술하는 성장 회계(growth accounting)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다. 성장 회계 분석 결과 [그림 2-2]에 나타난 것처럼, 1990년대의 침체기에서 도약(take-off)하여 빠른 성장을 기록하기 시작한 고도성장 국면에서 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생산요소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일컫는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이하 TFP)’이다. 그러나 그다음 성장 국면부터는 TFP 대신 자본축적이 성장을 주도하게 된다.⁶⁾

한편 러시아와 같이 자원 생산 및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국가의 경우 성장률과 생산성이 다소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자원이 가지는 독점성으로 인해 이를 판매할 경우 지대(rent), 혹은 다른 표현으로 경제적 수익(economic profit)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러시아가 주로 수출하는 석유 자원에 대한 지대를 제외하고 동일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림 2-2]의 오른쪽 패널을 보면 석유 자원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수익을 제외해도 분석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식별된 성장 국면이 각각 2000~03년, 2004~07년, 그리고 2008~14년으로 동일하며, 성장률 역시 두 번째 성장 국면에서 가장 높은 반면 세 번째 국면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다. 특히 생산성의 성장 기여도는 첫 번째 국면에서 가장 높고 두 번째 국면부터는 점차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본축적의 성장 기여도가 첫 번째 국면에서 가장 낮고 세 번째 국면에서 가장 높다는 것 역시 동일한 결과이다. 다시 말해, 석유 자원이 러시아 경제에 기여

6) 이러한 발견은 Voskoboynikov(2017)와 일맥상통한다. 그는 2008~14년 동안 러시아 경제성장 지체 현상은 주로 TFP 성장률 하락과 산업 부문간 노동 배분의 효율성 악화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TFP의 연평균 성장률은 2002~07년 사이 4.17%에서 2007~14년 사이 -1.41%로 급락하였다.

하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앞에서 식별한 성장 국면의 시기 구분과 각각의 국면에서 생산성이 기여하는 순서, 그리고 점차 증대되는 자본축적의 기여도라는 질적 특성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추정한 성장 구분을 기준으로 러시아의 경제성장을 평가하기로 한다.⁷⁾

본 장에서는 이러한 성장 회계 결과를 바탕으로 문헌 조사, 전문가 면담을 활용하여 각각의 국면이 지속되는 동안 벌어진 러시아 경제의 주요 대내외적 사건 및 그와 관련한 정책적 대응을 알아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숫자 이면에 숨겨진 여러 역사적 정황이 현재 러시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할 것이다. 또한 과거에 행해졌던 주요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를 따라가면서 앞으로 러시아 경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새로운 성장을 모색할 것인지 파악하기로 한다.

연구대상 기간 전반에 걸쳐 러시아 정부가 달성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표를 종합하면 ‘경제 안정’ 또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⁸⁾ 각각의 국면에서 벌어졌던 주요 경제 사건과 집행된 경제정책을 토대로 본 연구진은 각각의 성장 국면을 △ 1990년대 경기침체 이후의 경제회복기(2000~03년) △ 에너지 수출 확대에 의한 고도성장기(2004~08년) △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 모색기(2009년 이후)로 요약하였다.⁹⁾ 본 장에서는 이러한 평가를 기준으로 러시아 경제에 나타난 주요 대내외의 사건과 관련 경제정책을 서술하고자 한다.

7) 경제성장의 양태는 개별 국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므로 성장 회계를 통해 얻은 생산요소별 성장 기여도 그 자체보다 그러한 성장 기여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생산요소가 성장을 주도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2]에 나타난 것과 같이 러시아의 경우 자본축적의 성장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반면 생산성의 성장 기여도는 꾸준히 낮아지고 있으며, 두 번째 성장 국면부터 자본축적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 경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질적 성장이 아닌 양적 성장의 양태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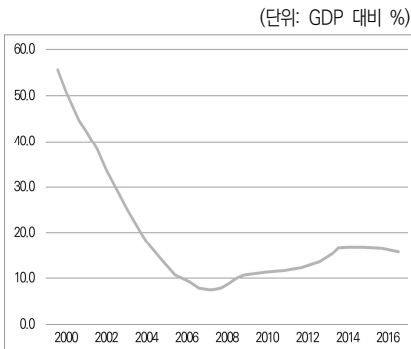
8) Cooper(2009), p. 9.

9) 여기서 구분된 시기가 바로 앞의 국면전환 추정을 통해 얻은 시기 구분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은 수치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질적 분석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주요 경제 사건과 정책 사이에 존재하는 시차로 인해 발생한다.

2. 1990년대 경기침체 이후 경기회복기(200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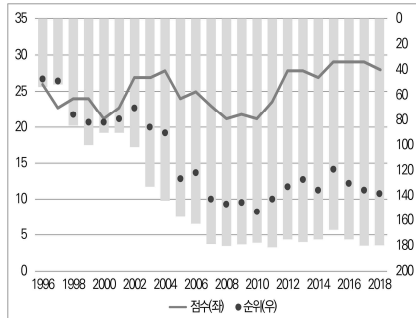
러시아는 1990년대에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 함께 극심한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다. 이는 러시아 경제가 새로운 시장경제 체제에 적합한 정책 시스템과 제도를 확립하지 못한 채 글로벌 경제에 무리하게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 중앙은행은 시장경제 통화정책의 운용 능력이 부족했다. 1990년대 통화 당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환율 타기팅(exchange rate targeting)과 인플레이션 타기팅(inflation targeting)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으나 환율 안정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 모두 달성하지 못했다.¹⁰⁾ 또한 1998년 경제위기는 심화된 재정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정책 시스템 및 의사결정 체제가 완비되지 못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¹¹⁾

그림 2-3. 러시아 정부 부채 추이
(2000~17)



자료: CEIC data(검색일: 2019. 3. 18).

그림 2-4. 러시아 부패인식지수 추이(1996~2018)



주: 1) 점수구간 0~100점.

2) 2011년 이전 지수의 경우 0~10점 구간을 0~100점 구간으로 변형한 것임.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3. 18).

10) Granville and Mallick(2006), pp. 1-22.

11) Spilimbergo(2007), p. 26.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경제안정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이 새롭게 고안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8년 경기침체의 교훈으로서 재정정책 측면에서 정부지출을 줄이고 균형재정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통화정책 측면의 변화는 물가보다 환율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통화정책 시스템의 성숙 없이 환율과 물가를 동시에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러시아 경제는 2000년 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이는 주로 글로벌 경기 호황, 경기침체기의 저저효과 및 과감한 개혁조치 등에 기인한다. [그림 2-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푸틴 집권 1기인 2000~03년에는 글로벌 경기 호황으로 러시아의 주요 수출상품인 국제유가가 상승하였고 러시아의 고성장이 시작된다. 높은 성장률과 균형재정을 위한 재정 당국의 노력으로 GDP 대비 정부 부채가 크게 줄어들어, 대외충격에 대응 가능한 여력을 조성할 수 있었다(그림 2-3 참고).

이와 함께 세제 개편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개혁 정책이 빠르게 추진되었다. 당시 러시아는 연방 및 지방 정부 간의 관할권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개인 또는 법인이 연방 및 지방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만 200가지가 넘는 경우도 있었다. 이후 세제개혁을 통해 중복적이고 복잡한 세금제도가 통합되고 간소화되었다.¹²⁾ 대표적인 성과로 행정구역 개편, 개인소득세 도입, 법인세 인하 등을 들 수 있다(표 2-1 참고). 세제의 간소화와 더불어 공공행정의 투명화가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 해당 기간에 러시아 부패인식지수가 다소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그림 2-4 참고).

12) Cooper(2009), pp. 9-10.

표 2-1. 체제전환 이후 경기회복기(2000~03년)

대외적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흥국 경제성장에 따른 글로벌 경제호황 → 글로벌 석유 붐 시작 • 미국과 EU, 러시아에 시장경제지위 부여(2002)
대내적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틴 집권(2000년 5월) •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경기회복
관련 정책	<p><개혁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구역 개편(89개 주 → 7개 연방관구 및 83개 주) • 세제 개편 및 투자환경 개선 - (2001) 단일 개인소득세 13% 도입 - (2001) 법인세 34 → 24% 인하 - (2001) 토지거래법: 사유재산 거래 허용 - (2002) 세제 통합 및 간소화 <p><거시경제정책: 정책방향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 지출감축을 통한 균형재정 추구 • (통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물가 및 환율 목표안정 추구 - 재할인율 금리 조정을 통한 통화시장 통제 - 1999년부터 관리변동환율제

주: 표와 관련된 내용은 해당 기간에 변화한 내용이며, 2019년 현재 상황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일례로 현재 러시아는 8개의 연방관구, 85개 주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Karen and Others(2011), pp. 8-36; Desai(2005), pp. 87-106 참고하여 저자 작성.

세제 개편 및 투자환경 개선과 토지의 사적소유 허용 등과 같은 시장 지향적 개혁조치는 2002년 러시아가 미국과 EU로부터 시장경제지위를 부여받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에 행해진 과감한 개혁조치들로 첫 번째 성장 국면에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개혁조치들로 중앙정부의 통치기반이 강화되어 러시아의 국가자본주의가 심화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있다. 주로 세제 개편 과정에서 세수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제권이 확대되면서 시장 자원을 연방정부가 직접 배분하는 행정 시스템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¹³⁾ 이러한 국가자본주의화 기초

13) 민지영(2017).

는 2004~08년에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하였으므로 다음 절에서 더욱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3. 에너지 수출 확대에 의한 고도성장기(2004~08년)

2004~08년 국제유가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러시아 경제는 고성장을 유지하였다. 이 기간 러시아는 신흥 경제강국으로 부상하며, 무역과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본격적으로 통합되기 시작한다(그림 2-5, 그림 2-6 참고). 빠른 경제성장으로 빈곤율이 크게 감소하였고, 임금이 상승하자 민간 소비가 활발해졌다(그림 2-7, 그림 2-11 참고). 2000년 GDP 기준 세계 20위였던 러시아는 2008년 GDP 기준 9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는 신흥국 중에서 중국, 브라질 다음으로 높은 순위였다.¹⁴⁾ 아울러 2006년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 관세동맹 창설에 합의하는 등 구소련 구성국들과의 경제통합을 도모하였다.¹⁵⁾

14) World Bank Data, GDP(Current US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검색일: 2019. 3. 20). 또한 글로벌 경제의 주요 국가들이 세계경제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G20 정상회의에 러시아가 포함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당시 러시아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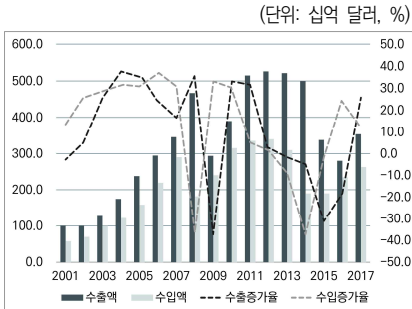
15) 구소련 붕괴 직후부터 구소련 구성국들 간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구속력을 갖는 형태의 경제통합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가, 2006년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가 관세동맹 창설에 합의함으로써 실효성을 갖는 경제통합이 시작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한편 러시아는 반러시아 또는 친EU적인 성향을 갖는 구소련 국가들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일례로 2006년 조지아, 몰도바에 대해서 수입 금지조치를 취했으며, 2008년에는 조지아와의 갈등이 심화되어 '5일 전쟁'을 치르기도 했다. 2009년 우크라이나와 천연가스를 둘러싼 분쟁을 겪었으며, 2014년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여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진다. 이재영, 이철원, 민지영(2017), pp. 24~28; Karen and Others(2011), pp. 8-36.

표 2-2. 에너지 수출 확대에 의한 고도성장기(2004~08년)

<p>대외적 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석유시장의 호황 지속 → 러시아 신흥 경제대국으로 부상(GDP 기준 2008년 세계 9위) • 글로벌 경제통합 가속화 - (2006) 관세동맹(CU) 창설 조약 체결
<p>대내적 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틴 2기(2004년 5월) • 중앙집권화 강화 - 부처개각: 기존 24개 부처를 14개로 축소 • 국가자본주의 추구: 再국유화 추진 - (2001) 러시아 최대 ORT TV 네트워크에 대한 정부 통제권 강화 - (2003) 유코스(Yukos) 사태: 유코스 최고경영자 탈세 혐의로 구속, 러시아 정부 유코스 주식 44% 동결 - (2004) 유간스크네프트가스(Yuganskneftegaz), 유코스의 가스생산기업에 대한 국가 수용, 이후 국영기업인 로스네프트(Rosneft)에 매각 - (2004) 로스네프트가 바이칼 금융그룹 매입 - (2005) 가스프롬 시브네프트(Sibneft) 지분 73% 매입, 사할린 에너지 지분율 51% 이상 확보 - (2006) VSMPO-Avisma 티타늄 기업에 대한 지분율 60%로 제고 - (2007) 통합항공기조사사(UABC) 지분율 51% 확보 등 • '네덜란드 병'에 대한 우려와 산업다각화 필요성 제기
<p>관련 정책</p>	<p><전략적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 「국가안보상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분야의 외국인 투자절차법」 제정 <p><거시경제정책: 정책 실행과 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적 틀 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 균형재정 추구 - (2004) 재정규칙 최초 도입, 즉 유가 배럴당 20달러 상회 시 추가 재정수입은 안정화기금에 축적 - (2007) 예산안을 위한 유가 기준가 배럴당 27달러로 조정, 안정적인 재정정책을 위하여 3년 예산안 제도 도입 - (2008) 안정화기금을 국부펀드와 보유펀드로 분리 • (통화) 환율 안정 목표 - 재할인율로 통화시장 통제 - 관리변동환율제하에서 환율 안정을 위한 외환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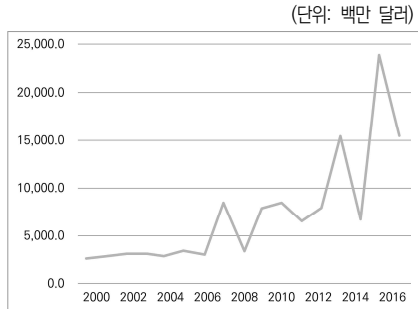
주: 표와 관련된 내용은 해당 기간에 변화한 내용이며, 2019년 현재 상황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Karen and Others(2011), pp. 8-36; Desai(2005), pp. 87-106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2-5. 러시아 무역 추이(2000~17)



자료: IHS Markit(검색일: 2019. 3. 21).

그림 2-6. 러시아 FDI 추이(2000~17)



자료: Russia Statistics Service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3. 15)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2-7. 러시아 빈곤율(2000~17)



자료: ЕВРОПЕ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 ОРГАНИЗАЦИИ ОБЪЕДИНЕННЫХ НАЦИЙ(2013), p. 4; Russia Statistics Service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3. 15)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같은 기간 전체 GDP에서 에너지, 광물 채굴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그림 2-9 참고). 자연스럽게 수출 측면에서 에너지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생산과 수출 모든 측면에서 에너지 자원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한층 심화되었다(그림 2-8 참고).

이로 인해 러시아 경제가 ‘자원의 저주’ 또는 ‘네덜란드 병’에 걸렸는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네덜란드 병’ 진단 기준은 크게 ① 실질환율 상승 ② 제조업 성장 둔화 ③ 서비스업 성장 가속화 ④ 전반적인 임금 상승 등이 있다.¹⁶⁾

러시아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실질환율과 실질임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그림 2-10, 그림 2-11 참고). 한편 [그림 2-12]를 살펴보면, 제조업 성장 둔화 및 서비스업 성장 가속화 현상이 뚜렷하다고 볼 수 없지만 △ 에너지 자원에 대한 높은 경제 의존도가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 미래의 기술력과 직결되어 생산성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생산 비중이 제고되지 않는 점(그림 3-2 참고)을 미루어볼 때, 자원에 대한 경제 의존이 심화 및 고착화되는 현상을 일컫는 ‘네덜란드 병’에 걸릴 위험이 상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점증하였다.¹⁷⁾ 이에 따라 산업구조 다각화 및 제조업 선진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관련 정책은 2009년이 되어 서야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림 2-8. 러시아 에너지 수출 추이 (200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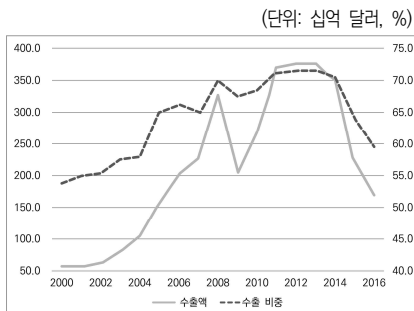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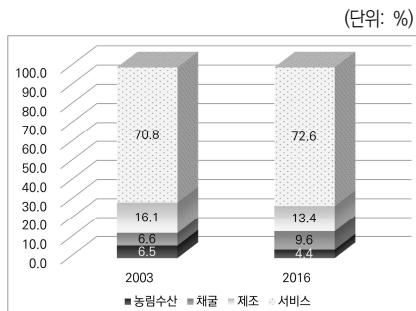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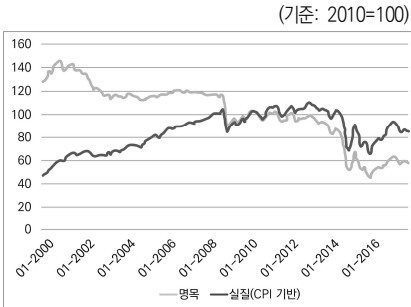
그림 2-9. 러시아 GDP 구조 변화 (2003 vs. 2016)



16) IMF(2007), p.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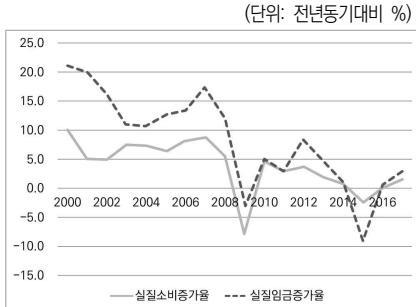
17) 러시아 경제의 ‘네덜란드 병’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헌을 참고할 수 있다. Ullrich(2014); Mironov and Petronevich(2015), pp. 97-112; Ito(2017), pp. 66-70.

그림 2-10. 러시아 효과환율 추이
(200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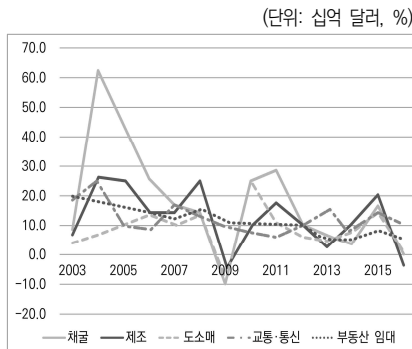
자료: BIS effective exchange rat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3. 21).

그림 2-11. 러시아 실질임금상승률 및 소매거래증가율(2000~17)



자료: IHS Marki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3. 21).

그림 2-12. 부문별 성장률 추이
(2003~16)



주: 부문별 성장률 데이터는 2003~16년까지.
자료: Russia Statistics Service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3. 15).

한편 푸틴 집권 2기에 해당하는 이 기간은 러시아의 국가자본주의가 강화된 시기이기도 하다. 푸틴은 집권 1기부터 중앙집권화를 위한 기초를 다졌으며, 방송사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였다. 또한 정권이 안정되자, 민영화했던 기업 주식을 다시 사들이거나 기업 소유자가 위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명분으로 소유권을 강제 수용하는 방식을 통해 기업 국유화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다 (표 2-2 참고).¹⁸⁾ 그 결과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정부 비중이 2003년 20%에

서¹⁹⁾ 2017년 35% 이상으로 크게 늘어났다(표 2-3 참고).²⁰⁾ 그리고 2008년 「국가안보상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분야의 외국인 투자절차법」²¹⁾이 제정됨으로써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이 제도화되었다. 이러한 반시장적 조치들로 인해 민간의 시장참여가 위축되고 민간 투자가 저해되어 투자의 상당 부분이 국가 주도로 행해지는 문제가 고착화되기 시작되었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존재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전달, 확산, 거래되어야 하는 민간의 생산요소가 제대로 배분되지 못해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이 악화되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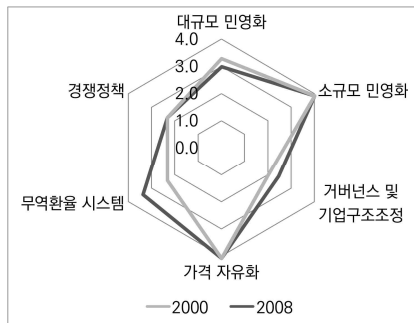
표 2-3. 러시아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10대 기업

(단위: 십억 달러, %)

	기업명	시가총액	비중
1	스베르뱅크	72.1	12
2	로스네프트	58.1	9
3	가즈프롬	52.2	8
4	루코일	44.4	7
5	노바텍	35.0	6
6	노르니켈	29.3	5
7	가즈프롬네프트	19.0	3
8	수르구네프트가스	18.4	3
9	타트네프트	15.9	3
10	엔엘엠케이	13.8	2

주: 1) 2017. 10. 23. 기준.
2) 굵게 표시한 기업이 공기업에 해당.
자료: Moscow Exchange(2017), p. 4(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3. 20).

그림 2-13. EBRD 전환지수 (2000 vs. 2008)



주: 평가지수는 1.0-4.0이며, 높을수록 우수함.
자료: EBRD, Transition Indicator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3.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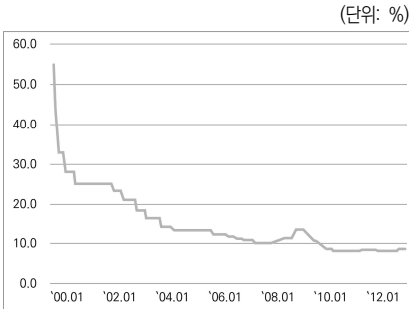
18) 예를 들어, 러시아 최대 민영 석유기업이었던 유코스(Yukos)를 재국유화한 사례가 있다. 유코스는 1996~2003년 러시아 석유생산의 20%를 차지하는 최대 민영기업이었다. 2003~04년에 있었던 유코스 사태는 유코스의 사장인 호도로프스키가 민영화 과정에서 탈세를 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것에서 시작된다. 당시 호도로프스키는 반푸틴, 친서방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여겨진다. 2005년 호도로프스키는 9년의 법정형을 선고받았으며, 유코스는 2006년 파산하여 다른 국영회사인 가즈프롬과 로스네프트에 인수되었다. 「러, 국영 가스·석유회사 합병 결정」(2004. 9. 15), 한겨레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3. 20); 「(유코스 사태) ⑤ 푸틴, 유코스 '조준사격」(2004. 7. 6), 이데일리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3. 20).

19) OECD(2006), p. 38.

20) 이러한 재국유화로 EBRD의 '대규모 민영화 지수'가 하락하기도 하였다(그림 2-1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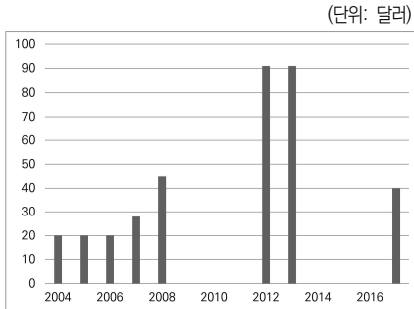
21)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2008).

그림 2-14. 러시아 재할인율 추이(2000~12)



주: 러시아는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재할인율을 1992년부터 활용했으며, 이는 2015년까지 유지됨. 2016년부터는 기준금리와 같은 수준을 가짐.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3. 25).

그림 2-15. 예산 기준 변화(2004~17)



주: 수치가 없는 기간은 예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자료: "Бюджетное правило 4.0"(2017. 6. 6), Kommersan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3. 25); Kluge(2019), p. 14.

한편 러시아 거시경제정책은 이 시기에 본격적인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균형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한 예로, 2004년 원유 판매 수입 일부를 국부펀드(National Wealth Fund)에 강제로 예치하도록 하는 '예산 기준(budget rule)'을 도입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7년에는 향후 3년간의 예산안을 미리 상정하도록 법제화하였으며 관리변동환율제하에서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환율 안정을 도모하기 시작하였다.

4.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 모색기(2009년 이후)

러시아는 2009년 이후 글로벌 경기둔화의 장기화와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경기둔화를 경험하고 있다. 2009년과 2014~16년 두 차례에 걸쳐 경기침체를 겪었는데, 이러한 경험들로 러시아는 재정 및 통화 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대외충격으로 인한 경기변동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90년대 거시경제정책 운용에서 실패했던 것과 다르게, 2009년 이후 러

아는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으로 대외충격에 대비함으로써 취약한 경제 펀더멘털과 심화된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경제를 안정되게 유지했다고 평가받는다. 실제로 2009년 전후로 경기가 급격히 수축하자 러시아는 적시에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다. 2008~10년 GDP 대비 13.2% 규모의 재정지원책이 마련되었고 관련 예산을 전략산업기업, 은행, 제조업, 가계 등에 투입하여²²⁾ 경제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한편 2013년에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기준금리를 도입하였다. 같은 해부터 중앙은행은 금융시장 연방청(Federal Service for Financial Markets)을 흡수하여 금융시장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금융안정화의 큰 틀을 갖추고 거시금융규제조치(macroprudential policy)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거시금융규제조치는 2007~08년에도 취해졌으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2013~14년(보장되지 않은 소비자 대출 증가 방지), 그리고 2016년(은행자산 달러화 방지)에 특별히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²³⁾

이후 2014년 말 유가급락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예상되자 환율 및 통화정책을 활용하여 외환시장 및 물가 안정을 유도했다. 그러나 자본유출 확대 등으로 환율상승 압력이 매우 거셌고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통화 당국의 소극적 개입으로는 환율상승 압력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악화되었다(그림 2-16, 그림 2-17 참고). 이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하여 자유변동환율제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유변동환율제하에서 단기적으로 환율과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매우 공격적으로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고 시장은 곧 안정되었다(그림 2-18, 2-19 참고). 이는 1990년대와 비교하여 대외충격에 대응하는 러시아의 거시경제정책 운용능력이 괄목할 정도로 발전하였음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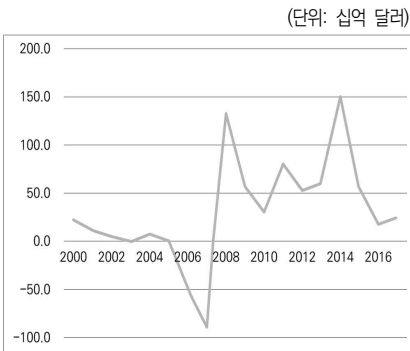
그러나 러시아 경기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지출이 급증하였고(그림 2-20

22) Ponomarenko and Vlasov(2010), pp. 6-8.

23) Danilova and Morozov(2017), pp. 306-315.

참고), 그동안 비축한 각종 국부펀드가 서서히 고갈되기 시작하였다(그림 2-21 참고). 이에 비교적 최근부터 정부수입을 늘리기 위한 각종 방안이 도입되고 있다. 2019년부터 인상된 부가가치세율 및 5년 연장된 연금수령 연령 등이 그 예이다.²⁴⁾

그림 2-16. 자본유출 추이
(200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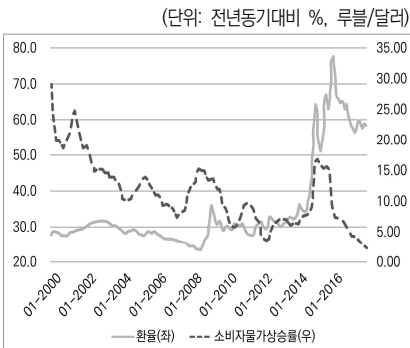
자료: CEIC(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3. 19).

그림 2-17. 러시아 외환보유고 추이
(200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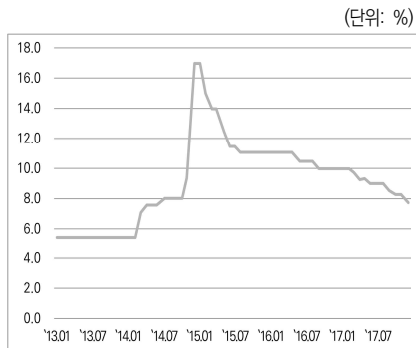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3. 19).

그림 2-18. 러시아 물가상승률과
환율 추이(2000~17)



자료: CEIC(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3.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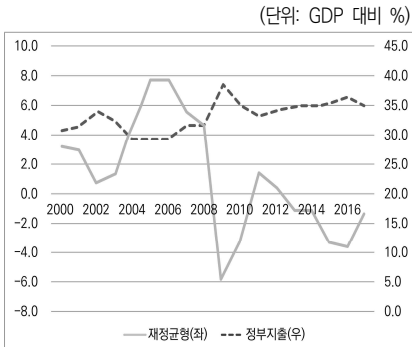
그림 2-19. 러시아 기준금리 추이
(2013~17)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3.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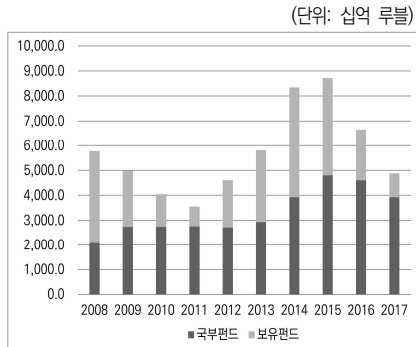
24) 정민현(2018); 민지영(2018). 이러한 조치로 정부의 재정수입이 늘어나는 대신 민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림 2-20. 러시아 재정균형과 정부지출 추이(2000~17)



자료: IMF, WEO(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3. 18).

그림 2-21. 러시아 국부펀드와 보유펀드 규모 추이(2008~17)



주: 기간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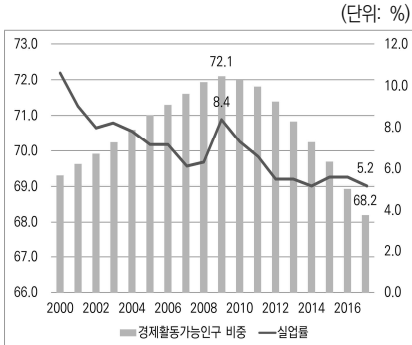
자료: 러시아 재무부(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3. 18).

한편 2008년 이후 고정자본투자가 제자리걸음을 하고(그림 2-24 참고) 경제활동가능인구의 감소,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하락으로(그림 2-22, 그림 2-23 참고) 에너지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러시아 경제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였다. 이에 2009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경제 구조조정을 위한 경제 현대화 정책을 발표하였다(표 2-4 참고). 이 정책은 구체적으로 △ 에너지 효율화 △ 원자력기술 △ 우주기술 △ 바이오기술 △ 정보기술 등 5대 혁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을 도모한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형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목표하에 ‘스콜코보 혁신센터(Skolkovo Innovation Center)’ 조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²⁵⁾ 장기 경제성장을 위해 기술 혁신 및 지식 창조가 핵심이 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려는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혁신사업 수행기관인 로스나노(Rusnano) 관계자의 자금 남용 사건 등으로 인해 오히려 중앙정부 주도 혁신의 부작용만 부각되었다.²⁶⁾

25)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성훈, 강부균, 민지영(2015), pp. 40~65를 참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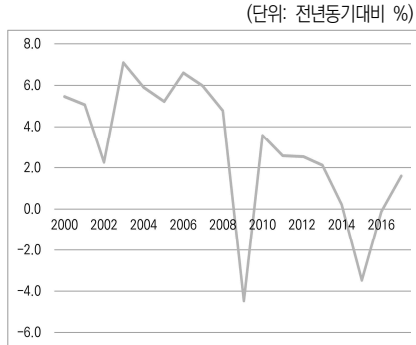
26) “Russia Arrests Rusnano Senior Official for Corruption”(2017. 6. 1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3. 25).

그림 2-22. 러시아 경제활동가능인구 및 실업률 추이(200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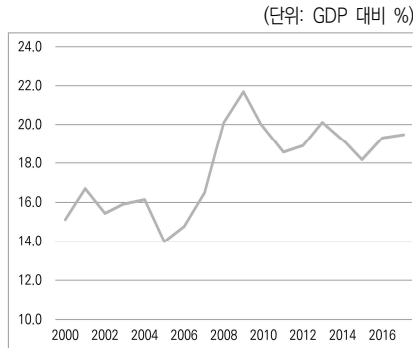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Development Indicator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3. 19).

그림 2-23. 러시아 노동생산성 증가율 (2000~17)



자료: OECD data(검색일: 2019. 3. 21).

그림 2-24. 러시아 고정자본투자(2000~17)



자료: World Bank Development Indicator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3. 19).

2012년 푸틴 3기에는 이전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정책 기초를 유지하면서 △ 투자환경 개선 △ R&D 및 혁신 부문 투자 확대 △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민영화 추진 △ 세제 개편 △ 지역경제 개발 등을 위한 방안이 모색된 바 있으나,²⁷⁾ 현재 까지 실질적인 성과는 투자환경 개선을 의미하는 Doing Business 지표 상승 (2012년 세계 118위 → 2018년 35위)²⁸⁾과 지역경제 개발을 위한 극동지역의

27) 이재영, 민지영, 강부균(2012), pp. 4~10.

선도개발구역, 자유항 등의 법제도 마련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산업 정책의 일부 수정·개선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이 역시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²⁹⁾

마지막으로 이 시기 러시아의 글로벌 경제통합은 다소 모순적인 양상을 보였다. 2012년 러시아가 WTO의 정회원국이 되고, 주변지역과 경제통합체를 형성하여 개방경제로서의 면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2014년 서방과의 갈등으로 이러한 개방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특히 2014년 이후 서방의 대러 제재가 본격화되고 그 이후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특정 수입품목에 대한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급기야 러시아의 무역정책 노선이 수입대체정책으로 선회하는 등 글로벌 경제통합과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고 있다.

28) Doing Business Data(검색일: 2019. 3. 25).

29) 러시아 산업부(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3. 25).

표 2-4.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 모색기(2009년 이후)

<p>대외적 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경기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8) 글로벌 금융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경기침체 경험(2009년 경제성장률 -7.8%) -(2011) 유로존 위기 → 러시아 경기둔화 본격화 -(2014) 유가급락 → 러시아 경기침체(2015년 경제성장률 -2.5%, 2016년 -0.2%) • 서방과의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금융·경제 제재 및 러시아 맞제재 → 러시아 경제에 대한 추가적인 악영향 • 글로벌/지역 경제와의 통합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년 러시아 WTO 가입 -주변지역과의 경제통합 심화: 관세동맹(2010) → 유라시아공동시장(2012) → 유라시아경제연합(2015)
<p>대내적 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틴의 권력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8년 총리 취임, 2012년 재집권 • 2009년 이후 경기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9, 2015~16 외부충격으로 인한 경기침체 -투자부진, 노동인구 감소, 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 모멘텀 상실
<p>관련 정책</p>	<p>〈거시경제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정책: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8~10) 경기부양책 추진 -(2009~17) 경기 상황에 따라 예산 기준 조정 -(2019) 재원확보를 위한 개혁안 채택: 부가가치세율(VAT) 제고(18 → 20%), 연금개혁(퇴직연령 5년 연장) • 통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 물가안정목표제로 전환, 기준금리 도입 -(2015) 자유변동환율제 전격 도입 <p>〈새로운 경제발전 모델 모색: 산업 다각화 정책 본격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9) 현대화 정책(5대 핵심 산업: 에너지 효율화, 원자력기술, 우주기술, 의료기술, 정보기술) -(2012) 지역균형발전: 극동개발정책 본격 추진 -(2015) 수입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입대체산업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지향형’ 수입대체산업정책

주: 굵은 글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글상자 2-1] 참고.

자료: 제성훈, 강부균, 민지영(2015), pp. 40~50; 이재영, 이철원, 민지영(2017), pp. 24~53을 기반으로 저자 작성.

글상자 2-1. 서방의 대러 제재로 인한 러시아 경제 충격과 대응정책(2014년 이후)

본 연구는 가용 데이터의 한계로 2015년 이후의 러시아 경제성장률에 대한 수치적 분석이 제외되었으나, 문헌 조사를 통해 서방제재가 가해진 2014년 이후의 러시아 경제 상황과 대러 제재에 대응하는 경제정책을 서술하고자 한다.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러시아 경제성장의 역사에서 2014년을 또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파악한다. 본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러시아는 2014년 유가급락과 서방제재로 인한 경기둔화를 경험하였다. 초기에는 대러 제재보다는 유가급락으로 인한 충격이 더 크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서방제재가 장기화되고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직간접적으로 러시아 경제 전반에 대러 제재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표 2-5. 참고).³⁰⁾

표 2-5. 서방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친 직간접적 충격: 부정적 충격을 중심으로

직접영향	① 기업 성과 ② 에너지 부문의 기술집약적 기업 합작에 대한 참여 제한 ③ 수출 감소
간접영향	④ 경제정책 변화 ⑤ 투자환경 악화 ⑥ 장기 성장률 하락 ⑦ 기타

자료: ACRA(2018)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우선 [①] 400개 이상의 러시아 기업의 생산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쳤다. 이들은 대부분 대규모 국영은행(은행 부문의 54%), 석유·가스 기업(해당 산업 총수입의 95%) 및 방산산업 부문에 속한 기업들이다. 이들이 소유한 자산은 러시아 GDP의 20~21%에 달한다. 대러 금융제재는 기업들의 자산 및 부채 구조에도 영향을 끼쳤다. 루블화 표기 대출 및 채권 비중이 크게 증가했으며, 외채 비중이 줄어들게 되어 자산 포트폴리오의 경직성이 심화되었다. 또한 데이터 저장 및 소프트웨어의 현지화로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하였다. [②] 기술집약적 합작기업이 에너지 부문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러시아의 에너지 생산 및 기술발전이 위축되었고 [①], [②]의 이유로 [③] 수출 또한 감소하였다.

[④] 대러 제재는 러시아 경제정책에도 영향을 주었다. 우선 무역장벽이 높아졌다. 러시아는 서방의 대러 제재에 대응하여 농산물 등의 서방 수입물품 수입을 제한하고 본격적으로 수입대체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국내 금융서비스 개편이 강요되었고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포트폴리오는 변화되었다. 기존에 사용하던 글로벌 금융서비스를 내부 금융서비스로 대체함으로써 금융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외환보유고 구성에서 달러의 비중이 줄어들었으며, 러시아 정부는 '탈달러화'를 추진하게 되었다.³¹⁾ [⑤], [⑥] 환율 변동성, 자금대출여건 악화 등으로 실질적인 투자여건이 악화되었으며, 상승한 요인들로 인해 장기 성장률이 낮아지게 되었다. [⑦] 서방제재 장기화로 부정적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예정되었던 다수의 합작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향후 러시아 에너지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서 에너지 및 원자재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 대상 기업들은 일

부 러시아 지방 경제재원의 상당 부분을 조달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상태 또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³²⁾

2014년 이후 서방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을 다룬 연구들은 대체로 제재가 장기화될수록 부정적인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측한다. IMF는 서방제재가 단기적으로는 투자, 소비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서방의 대러 제재와 그에 대응하는 러시아의 맞제재는 러시아 GDP의 1~1.5% 하락을 가져올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제재가 지속될 경우 자본축적 및 기술이전이 둔화됨으로써 생산성 향상이 더욱 지체될 것이며, 중기적으로 9%의 GDP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³³⁾ 블룸버그는 유가하락과 서방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5년간 약 10.5%의 GDP 손실을 보았다고 추산했다. 이 중 4.2%가 유가급락으로 인한 영향이며, 6.3%는 다른 영향, 주로 서방의 대러 제재로 인한 영향으로 파악되었다.³⁴⁾ UN은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연간 최대 1%의 GDP 손실을 야기하였다고 보았다. 2017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0.8% 낮았는데, 그 주된 원인을 서방제재로 꼽았다. 러시아가 받게 된 직접적인 손실은 1년에 150억 달러, 2017년까지 총 550억 달러로 추산되었다.³⁵⁾ 제재로 인한 경기악화는 가계수입 감소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여성 경제활동인구, 연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러시아 고등경제학교는 2018년 4월 미국의 대러 추가 제재가 당해 경제성장률을 약 0.2% 낮춘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해당 추가 제재는 러시아의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충격을 주었다. 주식, 환율, 자본유출, 투자 등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이 목격되었으며, 이러한 영향은 최소 1~2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였다.³⁶⁾ 전반적으로 서방과의 갈등 심화는 러시아 경제를 더 고립시키고 기술발전을 더디게 하여 경제성장을 둔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둔화와 더불어 서방으로부터 고립이 장기화되자 러시아는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을 더욱 절실하게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고민에서 수입대체정책이 제시되었다. 러시아가 수입대체산업정책을 논의한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기침체를 경험한 때부터였다. 러시아는 '경제적 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러시아 각 부문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였다. 수입대체산업정책은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서방과의 갈등이 점증하고, 러시아에 대한 서방제재와 러시아의 맞제재가 일어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이 공식 발표된 것은 2015년 3월 31일이었다. 초기에 19개 산업이 선정되었으며, 이후 일반무기 산업이 추가되어 총 20개 산업에 대한 수입대체정책이 추진되었다(표 2-6 참고). 이 중 수입품 의존율이 가장 높은 제약, 무선전자, 민간항공, 의료, 조선 등 5개 부문이 핵심 수입대체산업으로 지정되었다.

30) ACRA(2018), pp. 1-11.

31) "В Госдуме видят перспективы дедолларизации экономики"(2019. 1. 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 14).

32) 총 85개 지방 중 10개 지방(코미 공화국, 네네츠 자치구, 야말로-네네츠 자치주, 한티-만시 자치주, 페름 변경, 오펜부르크 주, 튜멘 주, 톱스크 주,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 이르쿠츠크 주)이 제재대상 기업들로부터 20%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33) IMF(2015), p. 5.

34) 블룸버그는 국제유가가 10달러 감소 시 러시아 GDP가 0.7% 감소하는 것으로 봄. Bloomberg(2018), "Russia Insight: Crippling Sanctions? No, But Economy is Bruised," 비공개 획득자료.

35) EU의 피해액이 약 1,000억 달러로 더 크게 나타남. 즉 총손실은 약 1,550억 달러로 추산됨. UN Human Rights Council(2017), pp. 9-12.

36) HSE(2018), pp. 2-3.

37) Tolkachev and Teplyakov(2019), p. 547.

표 2-6. 수입대체정책 목표 산업

산업 분야	프로젝트 수
경공업	31
민간항공	408
임업	34
화학	35
무선전자	534
운송 기계제조	19
자동차	67
농림업 기계제조	51
식품·가공 기계제조	15
도로건설 및 항공 장비	15
철강제련	15
비철금속제련	14
제약	601
의료	111
중공업	47
에너지 기계제작 및 전기·케이블	45
석유가스 장비제조	43
공작 기계제조	61
조선	107
일반무기	2
총 20개 산업	2,255개 프로젝트

주: 굵은 글씨는 핵심 산업.

자료: 러시아 산업부, <http://minpromtorg.gov.ru/>(검색일: 2019. 3. 19); 박지원(2016b), p. 22 참고하여 저자 작성.

러시아 정부는 수입대체정책이 완전히 실현될 경우 러시아의 수입품 의존도가 2015년 기준 70~90% 수준에서 2020년까지 50~60%로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³⁷⁾ 푸틴 대통령은 2015년 6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수입대체정책 추진을 위해 GDP의 약 3%에 해당하는 2조 5,000억 루블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하였다.³⁸⁾ 수입대체정책 추진 초기, 러시아의 농산물 및 식료품에 대한 맞제재의 영향으로 주로 농업 부문에서 수입대체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자동차 부문에서도 다소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⁹⁾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전 산업에 걸친 수입대체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우며, 긍정적인면 부정적인면 그 정책효과가 분명하게 식별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훨씬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산업 다각화 및 고도화가 진전되기 위해서 수입대체정책의 방향이 '수출지

향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책 초점이 '수출지향형'으로 조정되고 있다.⁴⁰⁾

38) Connolly and Hanson(2016), p. 11.

39) "RUSSIA'S IMPORT SUBSTITUTION: IMPRESSIVE RESULTS BY CARROTS AND STICKS... AND A LITTLE MONEY (PART 2 TO AWARA STUDY ON RUSSIA'S ECONOMY 2014 - 2016, YEARS OF SANCTIONS WARFARE)"(2017. 7. 2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3. 25).

40) Connolly and Hanson(2016), p. 8; IMEMO 세르게이 아폰체프(Sergey Afontsev) 박사 면담 (2019. 3. 6, 러시아 모스크바).

제3장 | 러시아 경제성장요인 분석

본 장에서는 제2장에서 구분한 각각의 성장 국면에서 자본, 노동, 생산성의 생산요소가 성장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그 후 앞 장에서 이미 언급한 러시아 경제의 산업구조 다각화 및 고도화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더욱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1. 실증분석: 성장 회계

성장 회계란 개별 국가의 성장요인을 객관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특정 생산 함수를 가정한 후 각각의 생산요소가 성장에 얼마만큼 기여하였는지 수치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일컫는다. 보통의 경우, 1차 동차(homogeneous of degree one)의 특징을 갖는 다음 형태의 콥-더글라스(Cobb-Douglas) 생산 함수를 가정한다.

$$Y_t = A_t F(K_t, L_t) = A_t K_t^a L_t^{1-a} \quad \dots \quad (1)$$

즉 t 시점의 총생산 Y_t 는 총요소생산성(TFP) A_t 와 물적 자본 K_t , 그리고 유효노동(efficiency unit of labor) L_t 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a 는 자본 K_t 에 귀속되는 총생산 Y_t 의 비중을 의미한다.⁴¹⁾ 자본과 유효노동, 그리고 총생산 모두 관측 가능하므로 TFP는 잔차항(residual)으로 계산된다. 편의를 위해 유효

41) 본 연구에서는 Benhabib and Spiegel(2005)과 Caselli(2005) 등을 따라 $a = 1/3$ 로 시간에 대해 불변하고 모든 국가에 대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노동 L_t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로 한다.

$$L_t = h_t N_t$$

여기서 h_t 는 1인당 인적자본이며 N_t 는 총인구수이다. 그러면 t 시점의 성장률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g_{Y,t} = g_{A,t} + a g_{K,t} + (1 - a) g_{L,t}$$

결국 각 생산요소의 성장률이 경제성장률 $g_{y,t}$ 를 설명하는 비중은 $g_{A,t}/g_{y,t}$, $a g_{K,t}/g_{y,t}$, 그리고 $(1 - a) g_{L,t}/g_{y,t}$ 가 된다. 이를 통해 각각의 생산요소가 특정 기간의 경제성장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수치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러시아 경제의 성장 회계 분석을 위해 Penn World Table Ver. 9.0(이하 PWT)을 사용하였다. PWT에는 1960년부터 2014년까지 성장 회계에 필요한 생산, 물적자본, 인적자본, 그리고 총인구수가 주어지므로⁴²⁾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러시아의 경제성장에 각각의 생산요소가 양적으로 얼마만큼 기여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다.

표 3-1. 러시아 경제의 성장 회계(2000~14년)

(단위: %)

성장 국면	기간	성장률			
		총생산(Y)	생산성(A)	자본(K)	노동(L)
1	2000-03	5.70	6.34	-1.46	0.84
		--	(111.2)	(-25.86)	(14.66)
2	2004-07	7.56	2.65	3.41	1.50
		--	(35.05)	(45.05)	(19.90)
3	2008~14	3.70	1.17	1.77	0.76
		--	(31.54)	(47.96)	(20.50)

주: 괄호 안은 각 생산요소가 성장에 기여한 기여도를 나타냄.
 자료: PWT(Ver 9.0, 검색일: 2019. 3. 14)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42)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nklaar and Timmer(2013)를 참고할 수 있다.

[표 3-1]에서 나타난 것처럼 생산성의 성장률은 첫 번째 고도성장 국면에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성이 성장에 기여하는 기여도 역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2003년 이후인 두 번째 성장 국면부터 생산성보다는 요소투입에 의존하는 구조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의 경제 성장구조가 2003년 이후 생산성의 개선에 의해 주도 되는 질적 성장(qualitative growth)이 아닌 요소투입에 의존하는 양적 성장(quantitative growth)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03년 이후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생산요소는 물적 자본축적으로 2003년 에너지 생산 및 수출 의존도가 심화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러시아 경제성장의 절반에 육박하는 약 45~48%가 물적 자본축적에 의존하고 있으며, 물적자본, 인적자본 및 노동과 같은 요소투입의 기여도는 65~70%에 달한다.⁴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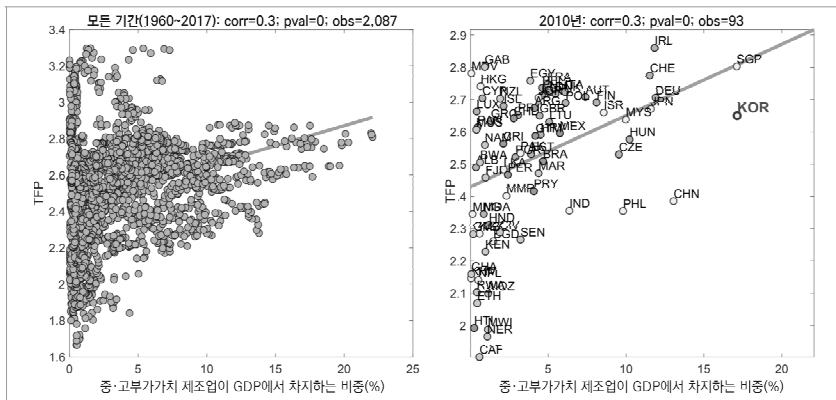
특히 2003년부터 자본의 성장 기여도가 크게 높아지고 생산성의 기여도가 낮아지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때부터 기술 혁신보다 대규모의 자본투입이 우선하는 석유, 광물과 같은 천연자원의 생산 및 수출 비중이 상승하는데, 이는 제조업 선진화로 대변되는 산업구조 다각화 및 고도화가 지연되고, 풍부한 에너지 부존자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를 쉽게 탈피하지 못하는 현상과 관련 있다.

제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다시 말해 중·고부가가치의 제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민간의 자발적인 시장참여가 보장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혁신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risk-taking) 용의가 있는 창발적(創發的)인

43) 제2장의 각주에서 이미 밝혔듯 경제성장의 양태는 개별 국가가 지니는 특성에 따라 편이하게 달라지기 마련이므로 성장 회계를 통해 얻은 생산요소별 성장 기여도 그 자체보다 그러한 성장 기여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생산요소가 성장을 주도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표 3-1]에 나타난 것처럼, 러시아의 경우 자본축적의 성장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반면 생산성의 성장 기여도는 꾸준히 낮아지고 있으며, 두 번째 성장 국면부터 자본축적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러시아 경제성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질적 성장에서 양적 성장의 양태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기업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센티브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첫 번째 성장 국면(2000~03년)에서 경험한 바 있는 제도 혁신과 유사한 형태의 개혁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제도 개혁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이 원활하게 혁신으로 이어지면서 배분적 효율성이 개선되어 국가 전체의 생산성이 향상된다. 또한 중·고부가가치의 제조업이 활발하다는 것은 자체적인 기술 혁신(technological innovation) 또는 외부의 기술 이전 및 수용이 큰 마찰 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은 생산성 향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는 [그림 3-1]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의 TFP는 앞 절의 식 (1)을 통해 구한 국가별 총요소생산성으로,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생산 비중과 생산성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⁴⁾

그림 3-1.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생산 비중과 생산성의 상관관계



주: 주요 석유수출국과 마가오는 오른쪽 패널에서 제외되었음.
 자료: PWT 9.0 및 WDI(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3. 14)를 토대로 저자 작성.

44)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은 UN의 제조업 분류 기준 SITC를 따른 것으로 SITC의 500번대 및 700번대 코드에 해당하는 제조업과 200번대 및 600번대 코드 중 일부 품목에 속하는 산업을 지칭한다. 해당 기준에 따른 주요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에는 기계,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통신, IT, 항공 등의 산업이 포함된다.

결국 러시아가 목표했던 산업구조 다각화·선진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면 △ 제조업 선진화를 위해서 요구되는 제도적 개선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과 △ 고부가가치 제조업이 육성되면서 발생하는 기술 발전 및 지식 개발로 인한 생산성 개선이 이루어지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성 증가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더욱 커져야 한다. 그러나 [표 3-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생산성의 성장 기여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하락한다는 사실은 목표했던 산업구조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1]에 요약된 성장 회계의 결과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만한 또 다른 함의가 있다. 이는 조금 더 기술적인 문제로 실물경제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태생적 특질에서 기인한다. 그 특질이란 자본과 노동의 한계수확이 체감(decreasing returns to scale)한다는 엄중한 사실이다. 이는 자본과 노동 투입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새로이 투자하는 자본과 노동으로부터 얻어지는 생산량 증가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자본축적이 지속되고 (유효)노동 투입은 한계가 있으므로, 요소투입의 성장 효과는 국가가 성장할수록 작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투입요소가 희소한 경제발전 초기에는 요소투입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양적 성장이 적합한 성장전략이 될 수 있지만, 일정한 발전 단계를 지나 자본축적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는 요소투입만으로 꾸준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을 달성하여 중진국 수준에 도달한 국가들이 질적 성장을 위한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제조업의 선진화와 같은 산업구조 전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시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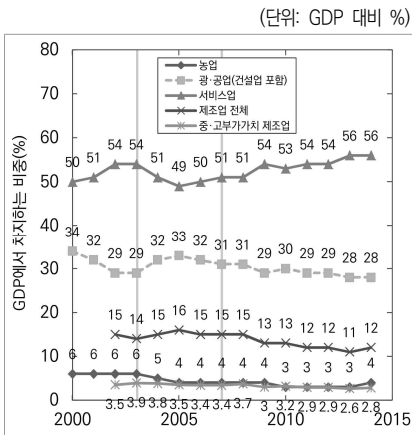
제2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러시아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여러 제도 개혁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고, [표 3-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실제로 이 시기 질적 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여 질적 성장이 보다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성장 국면부터 질적 성장이 아닌

양적 성장에 의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2009년부터 산업구조 다각화 및 고도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표 3-1]과 같은 데이터 분석으로는 아직까지 그 목표 달성이 요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러시아가 겪고 있는 산업구조 다각화·선진화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경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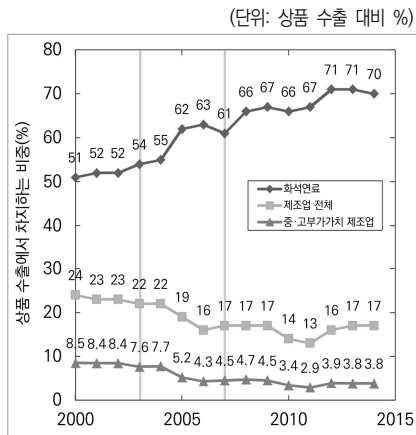
2. 러시아 경제 현황: 산업생산구조와 생산성을 중심으로

그림 3-2. 러시아 산업 생산 비중 추이 (2000~14)



자료: WDI(검색일: 2019. 3. 18).

그림 3-3. 러시아 주요 수출 상품 비중 추이 (2000~14)



자료: WDI(검색일: 2019. 3. 18).

본 절에서는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 경제의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제도적 차원의 문제를 간략하게 점검하기로 한다. 이는 상술하였듯, 기술 혁신이 동반되는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부문의 육성을 위해서는 창조적 파괴를 위한 창의적

인 기업가들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 체계를 보장하는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러시아의 부문별 산업 생산 비중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3-2]를 보면 2007년부터 광·공업(industry) 부문의 생산 비중이 점차 하락하는 반면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 비중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광·공업 부문의 축소와 더불어 주목할 것은 제조업(manufacturing)의 비중 역시 광·공업 부문 생산이 하락하는 2007년부터 하락 추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중진국⁴⁵⁾의 제조업 생산 비중 평균이 약 20%라는 점을 상기해보면 러시아의 제조업 부문 생산 비중은 그 절반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중요한 문제로써 기술 수준, 따라서 생산성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는 중·고부가가치(medium- and high-tech) 제조업⁴⁶⁾의 생산 비중 역시 2003년에 반짝 상승하였다가 2004년부터 하락하는 추이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러시아의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생산 비중은 2014년 기준 2.8%로서 소득이 훨씬 낮은 베트남의 5.5%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마찬가지로 [그림 3-3]의 오른쪽 패널을 보면, 제조업이 전체 상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이 시작되는 2000년 제조업 상품은 전체 상품 수출에서 24%를 차지하였지만 가장 최근인 2014년 17%까지 떨어졌다. 특히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수출 비중은 8.5%에서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8%까지 하락하였다. 반면 석유와 천연가스

45) 여기서 중진국은 World Bank의 중진국(middle-income country) 정의에 따라 1인당 국민총생산(GNI)이 2017년 기준으로 \$996에서 \$12,055 사이에 있는 국가들을 말한다. 러시아의 2017년 1인당 국민총생산은 \$11,179이다. 다만 광·공업 생산 비중은 소득 수준에 대해 역U형태(inverse-U shape)의 특성이 있으므로(Herrendorf, Rogerson, and Valentyni 2014) 제조업의 생산비중 역시 같은 형태를 가질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Herrendorf, Rogerson, and Valentyni 2014). World Bank의 정의에 따르면 1인당 국민총생산이 2017년 기준으로 \$12,055보다 높은 경우 고소득 국가(high-income country)라고 부르는데 고소득국가의 제조업 생산 비중 평균은 약 15%이다.

46)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은 위의 각주에서와 마찬가지로 UN의 제조업 분류 기준인 SITC에 따른 분류이며 해당 기준에 따른 주요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에는 기계,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통신, IT, 항공 등의 산업이 포함된다.

를 포함한 화석연료가 전체 상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두 번째 성장 국면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4년 70%에 이르게 된다.

결국 러시아 경제는 2000년 이후 빠르게 성장했지만 제조업 및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부문은 전체 경제의 성장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육성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이 상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하락하였고 반대로 화석연료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빠르게 상승하였다. 즉 자원 수출에 의존하는 단조로운 산업생산구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은 기술 혁신 및 신지식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부문이므로 이 부문의 발전이 전체 경제의 성장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는 것은 경제성장이 생산성 향상보다는 자본 및 노동 투입에 주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론은 바로 앞 절에서 얻은 러시아 경제의 성장 회계 결과와 일치한다.

기술 수준 외에 그 국가의 제도적 질 역시 생산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이는 서론에서 설명했듯, 경제 행위의 바탕이 되는 경제적 동기(incentive)가 제도에 크게 영향받고 이는 경제의 배분적 효율성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해외의 선진 기술 및 지식의 이전, 습득, 전파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institutional barriers)’이라는 개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거나 자체적인 혁신이 이루어지는 제조업 부문에서 해외 선진 기술 및 지식의 전파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제도적 장벽이란 국가 간 지식 및 기술의 이전과 습득을 가로막는 유·무형의 마찰(friction)을 일컫는다. 경제성장론에서 상정하는 기술, 더 넓게 말해 지식이란, 그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뿐 아니라 비경합성(non-rivalry)을 가지고 있으며, 지적재산권과 같은 독점권으로 배제되지 않는 한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을 가지고 있다. 흔히 이러한 기술 또는 지식은 상품 및 서비스에 내재(embedded)되어 있어 많은 경우에 국가 간 무역을 통해 전이된다.⁴⁷⁾ 문제는 현실에서 지식 이전(transfer), 수용(adoption)을 가로막는 여러

제도적 장벽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해외의 기술·지식을 이전받거나 습득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해야 하는 경우를 상정해보자.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금융제도가 발달하지 못해 차입이 어렵다면 기술 및 지식 이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Aghion, Howitt, and Mayer-Foulkes 2005). 비슷한 논리로, 당장 생존하기 위해 일정한 비용을 식품, 의류와 같은 필수재에 지출(subsistence level)하여야 한다면 기술 및 지식 습득은 늦춰지게 된다(Wang and Wang 2015). 보다 정치적인 이유로, 엘리트 집단이 정치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권력 유지에 잠재적으로 해가 될 수 있는 선진 기술 수용 및 지식 습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경우도 있다(Acemoglu and Robinson 2006). 비슷한 관점에서, 부정부패가 심각하거나 지대추구(rent-seeking) 행위가 만연한 경우 또는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재능과 재원이 있는 경제주체가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여 시장 참여를 할 인센티브 자체가 형성되지 못한다. 따라서 제도적 장벽이 높을수록 기술 및 지식의 수용과 이전이 힘들어지므로 생산성의 성장이 저해된다.

본 절에서는 러시아의 제도적 장벽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Basu and Weil(1998)에서 소개된 기술·지식의 국가 간 이전·수용 모형을 사용하기로 한다. 우선 식 (1)에서 사용된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의 1차 동조성을 활용하면 다음의 식을 유도할 수 있다:

$$y_{i,t} = \frac{Y_{i,t}}{L_{i,t}} = \frac{A_{i,t}F(K_{i,t}, L_{i,t})}{L_{i,t}} = A_{i,t}f(k_{i,t}) \quad \dots \quad (2)$$

여기서 $y_{i,t}$ 는 t 시점에서 국가 i 의 1인당 국민소득(또는 유효노동 1단위당 국민소득)이고 $k_{i,t} = K_{i,t}/L_{i,t}$ 로서 1인당 자본량(또는 유효노동 1단위당 자본량)이 된다. 마지막으로 $f(k)$ 는 $f(k) = F(k, 1)$ 로 표현되는 함수 변형이다. 이

47) 이와 관련하여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무역을 통한 지식 전파와 그로 인한 경제성장의 관계는 Alvarez, Buera, and Lucas(2017)를 참고할 수 있다.

때 미국이 기술·지식의 프론티어(frontier)에 있다고 가정하고 식 (1)과 (2)로부터 다음의 식을 유도할 수 있다.

$$y_{US,t} = A_{US,t} k_{US,t}^a$$

여기서는 Wang, Wong, and Yip(2018)을 참고하여 국가 i 가 기술·지식의 프론티어에 있는 미국으로부터 일정 비율만큼 자유롭게 기술을 이전·습득·모방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다음의 관계를 고려할 수 있게 된다:

$$A_{i,t} = \tau_{i,t} A_{US,t} \min \left[1, \left(\frac{k_{i,t}}{k_{US,t}} \right)^{\xi_i} \right] \quad \dots \quad (3)$$

여기서 $\tau_{i,t} \in (0, 1)$ 는 국가 i 에 제도적 장벽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때 미국과 국가 i 간의 생산성 격차를 나타낸다. $\xi_i \in [0, 1 - a]$ 는 제도적 장벽에 의해 발생하는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를 의미하는 모수(parameter)로서, ξ_i 가 0일 경우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는 순전히 $\tau_{i,t}$ 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xi_{i,t}$ 의 값이 크면 클수록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며 그 격차는 미국과의 자본량 격차 $(k_{i,t}/k_{US,t})^{\xi_i}$ 에 따라 달라진다. 즉 $\xi_{i,t}$ 는 최첨단 기술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습득·모방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저해함으로써 생산성 격차를 더욱 커지게 만드는 비경제적 요인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제도적 장벽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격차를 식별하기 위해 식 (3)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frac{y_{i,t}}{y_{US,t}} = \tau_{i,t} \min \left[1, \left(\frac{k_{i,t}}{k_{US,t}} \right)^{\xi_{i,t}} \right] \left(\frac{k_{i,t}}{k_{US,t}} \right)^a \quad \dots \quad (4)$$

지금까지 논의를 토대로, 생산성 향상이 성장을 주도한 러시아의 첫 번째 성장 국면에서 생산성 제고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 $\xi_{i,t}$ 가 다른 성장 국면의 제도

적 장벽보다 낮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반대로 생산성 향상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현저히 줄어드는 2004년부터 $\xi_{i,t}$ 가 높아질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앞 절에서 사용한 PWT 자료와 식 (4)를 이용하여 러시아의 제도적 장벽이 제2장에서 식별한 성장 국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로 계산할 수 있다. [표 3-2]에 정리된 실제 계산 결과를 보면 이러한 추측이 잘 들어맞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 성장 국면별 제도적 장벽 추이

성장 국면	1	2	3
기간	2000-03	2004-07	2008-14
ξ	0.26	0.65	0.59

자료: PWT(Ver 9.0, 검색일: 2019. 3. 14)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생산성 향상이 가장 눈에 띄었던 첫 번째 국면에서 생산성 향상과 부의 관계를 갖는 제도적 장벽이 가장 낮게 계산되었다. 반면 양적 성장이 강조되기 시작한 두 번째 성장 국면부터 제도적 장벽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장에서 문헌 및 전문가 조사를 활용하여 정리한 것과 같이, 첫 번째 성장 국면에서 기업 가정신을 장려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었던 반면 2004년 들어서는 국유화가 다시 추진되고 중앙정부 차원의 자원 배분이 강조되는 등 시장경제에 반하는 조치들이 취해졌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제도적 변화들은 [표 3-2]에 요약된 러시아의 제도적 장벽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한 세 번째 성장 국면에서는 두 번째 성장 국면보다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첫 번째 성장 국면보다는 높은 수준의 제도적 장벽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 도출한 러시아 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상품 무역을 통한 생산성 제고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위해 첫 절에서는 경제성장과 국제무역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실증연구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 후 본격적인 실증분석을 통해 러시아와 같은 중위소득 국가가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 고소득국가와 상품 무역을 확대하거나 상품 수입을 늘렸을 때 생산성 성장 및 중·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1. 국제무역과 경제성장의 관계: 선행연구 정리

국제무역과 경제성장의 관계는 경제학의 오래된 주제이다. 특히 세계화가 급진전되기 시작한 2000년 초·중반 무렵 국제무역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논의는 Rodriguez and Rodrik(2001)의 실증분석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무역과 성장의 실증 모형에 존재하는 내생성 문제를 지적하며 무역의 경제성장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제도, 기후와 같은 설명변수를 모형에 추가할 경우 무역의 경제성장 효과는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보였다. 그러나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거나(Lee, Ricci, and Rigobon 2004) 정치·기후·제도 관련 변수들을 통제하여도(Yanikkaya 2003; Alcalá and Ciccone 2004) 국제무역의 경제성장 및 생산성 성장 효과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

을 보고하는 실증연구가 있다. 한편 Wacziarg and Welch(2008), Waugh and Ravikumar(2016) 등은 무역 자유화 및 금융 자유화가 대체적으로 소득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보였다.

비교적 최근에는 무역확대가 개별 기업 차원의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미시 이론 및 실증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에 따르면 무역이 기업 차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시장 경쟁의 활성화이다. 국가가 시장을 개방하거나 무역을 확대할 경우 개별 기업은 더 큰 경쟁에 노출된다. 따라서 자체적인 기술 개발과 혁신을 꾀하고 운영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을 제고하게 된다. Melitz(2003)가 이론적 틀을 공식화한 후, Bloom, Draca, and Reenen(2016) 등 여러 실증 연구에 의해 그 효과가 확인되었다.

둘째, 시장 규모 확대 효과이다. 시장이 개방되면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더 큰 소비시장을 갖게 된다. 혁신을 위한 기술 개발 및 R&D 투자는 일반적으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특성을 가지므로 더 큰 소비시장이 생겼을 경우 기술 개발 노력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다. Verhoogen(2008)을 포함한 여러 실증 연구는 시장 규모 확대에 의한 품질 개선 효과를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고품질 중간재의 다양화·저렴화를 들 수 있다. 무역이 확대되면 품질이 우수한 중간재(intermediates)가 더욱 다양해지고 가격이 저렴해지므로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품질 상승과 비용 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Broda and Weinstein(2006) 등은 이로 인한 후생 증진을 설명하는 이론 모형을 제시하였고, Goldberg *et al.*(2010)은 인도의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간재 수입이 증가할 때 기업 차원의 생산성이 상승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가용한 러시아 기업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으로 본 연구는 기업 차원의 미시 실증분석 대신 각 국가의 집계 변수(aggregate variables)를 활용한 국가 차원

의 거시 실증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다만 Yanikkaya(2003) 등에서 미처 통제하지 못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적패널GMM(dynamic panel GMM) 추정 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또한 국제무역이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실증분석의 발견을 토대로 국제무역과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기로 한다.

한편 Kim(2011) 등은 무역과 성장의 효과가 성장 단계별로 상이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는 특정 발전 단계의 국가들은 무역확대를 통한 성장 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외에 중위소득국가들만 따로 구분하여 동일한 실증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무역의 성장 효과가 러시아가 속한 중위소득국가군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는지 확인하였다.

2. 국제무역과 경제성장의 관계

본 절에서는 경제성장률이 무역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Arellano and Bond(1991), Arellano and Bover(1995), 그리고 Blundell and Bond(1998) 등에서 발전된 동적패널GMM(dynamic panel GMM) 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성장회귀(growth regression)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OLS 대신 동적패널GMM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OLS에서는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내생성(endogeneity)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실증분석의 목표는 교역량이 소득과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교역량에 따라 소득과 생산성이 달라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생산성 역시 무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또는 생산성이 향상될수록 교역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직관적으로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설명변수(교역

량)와 종속변수(소득 혹은 생산성) 사이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둘째, OLS 회귀 모형에서는 시변 효과(time effect)가 충분히 통제되지 못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OLS 모형이 어떤 한 시점에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정적인 회귀(static regression)이기 때문이다. 성장회귀에서의 OLS 모형은 특정 기간 사이의 성장률 또는 평균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 기간에 각 변수들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하면 각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시계열(time-series dimension) 정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OLS에서는 관측되지 않은 설명변수가 추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누락변수편의(omitted variable bias)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동적패널GMM은 OLS가 가지는 이러한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장점이 있다. 첫째, 동적패널GMM은 전기의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들을 도구변수로 활용함으로써 내생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다.⁴⁸⁾ 또한 각 변수의 시계열 정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 개체의 고유특성(time-invariant individual characteristics) 및 모든 개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변효과를 각각 개체 더미와 시간 더미로 통제함으로써 누락변수편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⁴⁹⁾

48) 동적패널GMM은 전기의 변수들을 도구변수로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Arellano and Bond(1991)에 의해 개발된 1차차분GMM(first-difference GMM)이고 두 번째는 Arellano and Bover(1995)와 Blundell and Bond(1998) 등에 의해 개발된 시스템GMM(system GMM)이다. 전자의 방법이 전기 변수들의 수준(level)만 도구변수로 사용하는데 반해 후자는 수준뿐 아니라 각 변수의 차분(difference) 역시 도구변수로 활용한다. 사용된 변수들의 시계열 안정성(stationarity)이 존재할 때, 오차항(error term)에 시계열 상관성이 없다면 1차차분GMM과 시스템GMM 방식을 통한 추정량(estimates)은 일치성(consistency)을 갖는다. 이때 추정에 사용된 데이터의 자기상관성이 높을 때, 시스템GMM을 통한 추정치가 1차차분GMM보다 더 효율적(efficient)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다(Blundell and Bond 1998). 소득 및 생산성에 존재하는 높은 시계열 상관성을 고려하였을 때 시스템GMM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GMM 방법을 사용하였다.

49) 그러나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설명변수들이 누락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므로 누락변수편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본고에서 고정효과(fixed effect) 또는 확률효과(random effect)를 고려하는 일반적인 패널분석 대신 동적패널GMM 추정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전기의 변수들을 활용하여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사이의 내생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 이외에도 추정치의 일치성을 확보할 수 있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다음의 회귀식을 사용하였다:

$$\log y_{i,t} = (\theta + 1)\log y_{i,t-1} + X_{i,t-1}\beta + \overline{\gamma trade}_{i,t-1} + u_i + D_t + \varepsilon_{i,t} \quad \dots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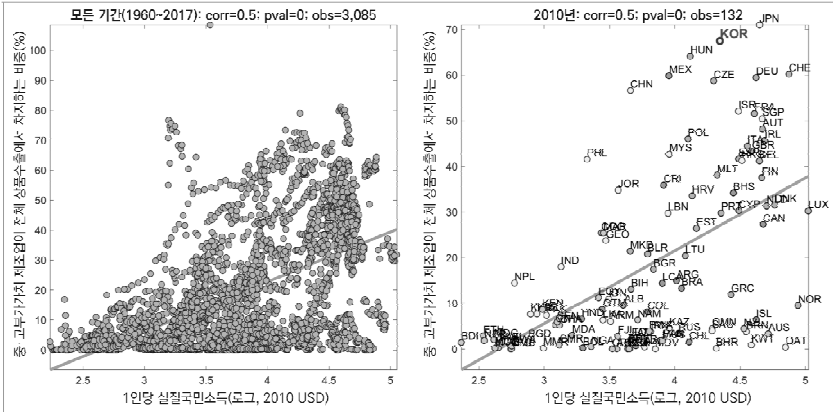
식 (6)에서 $y_{i,t}$ 는 t 시점에서 국가 i 의 1인당 실질 GDP 또는 생산성(TFP)이다. 따라서 식 (6)의 좌변은 $t-1$ 시점과 t 시점 사이의 실질경제성장률 또는 생산성 성장률이 된다. $X_{i,t-1}$ 은 일반적인 성장회귀에서 매우 자주 쓰이는 네 개의 설명변수를 포함하고 있다.⁵⁰⁾ 즉 $\Delta t-1$ 기의 소득 수준(initial income level) $\Delta t-1$ 기와 t 기 사이의 평균 투자율(average invest-to-output ratio) $\Delta t-1$ 기의 교육 수준(initial human capital level) $\Delta t-1$ 기와 t 기 사이의 인구 증가율(population growth rate)이 그것이다. 우변의 $\overline{trade}_{i,t-1}$ 은 $t-1$ 시점과 t 시점 사이에 국가 i 의 평균 무역량 비중(trade-to-output ratio)이다. 마지막으로 u_i 와 D_t 는 각각 국가고정효과(country fixed effect)와 시간고정효과(time fixed effect)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분석 기간은 1960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t-1$ 과 t 는 5년의 간격이다. 따라서 회귀식 (6)의 좌변은 5년간의 경제성장률 또는 생산성 성장률이 된다.

무역량을 나타내는 설명변수 $\overline{trade}_{i,t-1}$ 을 위해 본 실증분석에서는 관례에 따라 소위 '무역개방도(openness)'라고 불리는 변수를 사용한다. 무역개방도란 수출량과 수입량을 더한 총교역량의 GDP 비중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부가가치 산업에 강점이 있는 국가들과 상품 무역을 확대하였을 때 경제 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된다는 사실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역개방도 이외에도, 고소득국가들과의 상품 무역 규모를 설명변수 $\overline{trade}_{i,t-1}$ 로 사용할 것이다.⁵¹⁾ 이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수출 비중

다는 장점 때문이다. 본문의 식 (6)에서처럼, 전기의 종속변수 $y_{i,t-1}$ 이 설명변수로 사용되는 동적패널 모형(dynamic panel model)의 경우 설명변수에 강외생성(strict exogeneity)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고정효과 또는 확률효과 추정법으로는 추정치의 일치성(consistency)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50) 이 변수들은 장기 성장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시기구분, 샘플의 종류, 그리고 회귀 모형(specification)에 대해 매우 강건한(robust) 특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Levine and Renelt 1992).

이 높아지기 때문이다(그림 4-1 참고).

그림 4-1. 소득,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생산 및 수출 비중



자료: PWT 9.0 및 WDI(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3. 14)를 토대로 저자 작성.

따라서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고소득국가들로부터 상품 수입을 늘렸다면 이는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상품의 수입 비중이 늘어남을 의미한다. 이 때, 바로 앞 절의 선행연구 요약에서 확인하였던 것처럼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상품의 수입을 통해 국내의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상품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시장규모 확대로 규모의 경제 실현이 용이해지며, 다양한 고품질의 중간재를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므로 국내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기업의 생산성이 제고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의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발전이 촉진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다음 절의 실증분석에서는 이러한 추론을 데이터를 통해 입증할 것이다.

[표 4-1]은 무역과 경제성장에 관한 회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⁵²⁾ (1)열에

51) 여기서 고소득국가는 위의 각주와 마찬가지로 World Bank의 정의에 따른다. 즉 1인당 국민총생산(GNI)이 2017년 기준으로 \$12,055보다 높은 경우 고소득국가(high-income country)라고 부르기로 한다.

52) 모형의 과대식별 문제를 테스트하기 위해 Sargan 통계량 대신 Hansen 통계량을 사용하였다. 이는 Sargan 통계량이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 및 자기상관(auto correlation)에 강건하지 못하

표 4-1. 무역과 경제성장의 관계(전체 국가와의 무역)

VARIABLES	(1)	(2)	(3)	(4)
	Full Sample	Mid Income Only	Full Sample	Mid Income Only
	Income Growth	Income Growth	Income Growth	Income Growth
Exports+Imports (% of GDP)	0.000369** (0.000144)	0.000575** (0.000282)		
Imports (% of GDP)			0.000581** (0.000280)	0.000981* (0.000515)
Initial income (logged)	0.958*** (0.0156)	0.954*** (0.0539)	0.963*** (0.0150)	0.971*** (0.0535)
Population growth (%)	-2.010** (0.902)	-3.385*** (1.179)	-1.964** (0.890)	-3.099*** (1.155)
Initial human capital	0.0594* (0.0352)	0.0424 (0.0403)	0.0522 (0.0345)	0.0320 (0.0423)
Average investment rate (% of GDP)	0.00815*** (0.00187)	0.00403** (0.00158)	0.00810*** (0.00189)	0.00388** (0.00177)
Observations	1,006	415	1,006	415
Number of id	134	71	134	71
# of instruments	128	43	128	43
2nd-order autocorr (pval)	0.192	0.123	0.197	0.133
Hansen test (pval)	0.178	0.159	0.177	0.157

주: 1) (1)-(4)의 종속변수는 t 시점의 1인당 GDP이며 'Initial income (logged)'의 계수는 식 (6)의 $\theta + 1$ 임. 따라서 추정계수가 1보다 작다면 초기 1인당 GDP가 높을수록 소득성장은 낮아짐을 의미함.

2) 괄호 안은 이분산에 강건한(robust) 표준오차를 나타냄(***) $p < 0.01$, ** $p < 0.05$, * $p < 0.1$.

자료: PWT 9.0, WDI(온라인 자료, 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3. 14).

기 때문이다. 반대로 Hansen 통계량은 이분산성 및 자기상관에 강건하지만 사용된 도구변수가 많아 질수록 통계적 유의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도구변수의 수를 패널그룹 수 (number of id)보다 작아지도록 한다(the rule of thumb). [표 4-1]에 나타난 것처럼 (1)부터 (4)까지 도구변수의 수는 패널그룹 수보다 작도록 설정되었다. 이때 Hansen 테스트의 귀무가설은 도구변수의 사용에 있어 과대식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해당 귀무가설은 기각되지 않는다. 또한 사용된 도구변수의 적절성(validity)을 확인하기 위해 오차항의 자기상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오차항의 1차 차분($\Delta e_{i,t}$)에 2계 자기상관(second-order autocorrelation)이 존재하는지 테스트한 후 그 결과를 표에 정리하였다. 테스트의 귀무가설은 오차항의 1차 차분에 2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해당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으므로 도구변수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서 보는 것과 같이 GDP 대비 무역 비중이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이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열은 러시아가 속한 중위소득국가(mid-income country)로 표본을 한정하였을 때의 결과를 나타낸다. 여기서 중위소득국가란 매 시점을 기준으로 그해의 1인당 GDP가 상위 25%에서 하위 25%에 속한 국가들이다. 따라서 중위소득국가의 수는 전체 표본의 절반이 된다. 이렇게 중위소득국가들만 따로 구분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는 이유는 앞 절에서 밝혔던 것처럼 개별 국가의 발전 단계, 즉 소득에 따라 무역의 성장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Kim 2011).

표의 (2)열에 나타난 것처럼 무역개방도가 높아짐에 따라 중위소득국가의 성장률 역시 상승함을 알 수 있으며 이때 상승폭은 전체 샘플로 회귀분석을 하였을 때보다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무역확대의 성장 효과는 소득별로 상이하지만, 중위소득국가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성장 효과가 여전히 존재하고 이때의 성장 효과는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의 성장 효과보다 더 높다.

다음으로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 규모가 아닌 수입 규모만 고려하였을 때의 경제성장 효과를 알아보기로 하자. [표 4-1]의 (3)열은 수입의 GDP 비중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 결과이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수입 비중의 증가 역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표의 (4)열을 통해 중위소득국가에 있어서도 수입 비중의 증가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의 성장 효과는 무역개방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체 표본의 성장 효과보다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고소득국가와의 상품 무역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 회귀식 (6)의 $\overline{trade}_{i,t-1}$ 을 전체 국가와의 무역량이 아닌 고소득국가와의 상품 무역량으로 대체하였다. [표 4-2]를 통해 고소득국가와의 상품 무역을 확대하면 경제성장이 촉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표의 (1)열과 (2)열에 나타난 경제성장 효과는 [표 4-1]의 (1)열과 (2)열에 나타난 성장 효과보다

표 4-2. 무역과 경제성장의 관계(고소득국가와의 상품 무역)

VARIABLES	(1)	(2)	(3)	(4)
	Full Sample	Mid Income Only	Full Sample	Mid Income Only
	Income Growth	Income Growth	Income Growth	Income Growth
Exports+Imports (% of GDP)	0.000980*** (0.000265)	0.00107*** (0.000349)		
Imports (% of GDP)			0.00138*** (0.000443)	0.00151* (0.000830)
Initial income (logged)	0.940*** (0.0176)	0.935*** (0.0344)	0.973*** (0.0166)	0.923*** (0.0463)
Population Growth (%)	-1.827* (1.022)	-3.260*** (1.210)	-2.143** (0.898)	-2.661** (1.355)
Initial human capital	0.0904** (0.0392)	0.0407 (0.0365)	0.0271 (0.0348)	0.0565 (0.0370)
Average investment rate (% of GDP)	0.00733*** (0.00191)	0.00160 (0.00245)	0.00823*** (0.00221)	0.00643** (0.00252)
Observations	954	440	956	442
Number of id	135	72	135	72
# of instruments	128	72	128	72
2nd-order autocorr (pval)	0.399	0.222	0.382	0.158
Hansen test (pval)	0.190	0.566	0.341	0.281

주: 1) (1)-(4)의 종속변수는 t 시점의 1인당 GDP이며 'Initial income (logged)'의 계수는 식 (6)의 $\theta + 1$ 임. 따라서 추정계수가 1보다 작다면 초기 1인당 GDP가 높을수록 소득성장률은 낮아짐을 의미함.

2) 괄호 안은 이분산에 강건한(robust) 표준오차를 나타냄(*** $p < 0.01$, ** $p < 0.05$, * $p < 0.1$).

자료: PWT 9.0, WDI(온라인 자료, 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3. 14).

더욱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고소득국가들과 상품 무역량을 확대하였을 경우 연계 되는 성장 효과가 전체 국가와의 무역량을 확대하는 경우의 성장 효과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상품 무역 수출입 비중이 아닌 상품 수입 비중이 늘었을 때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표 4-2]의 (3)열과 (4)열에 나타난 것처럼, 고소득국가로부터 상품 수입을 늘렸을 때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4-1]과 [표 4-2]의 비교를 통해 이때의 성장 효과는

전체 국가로부터 수입 비중을 늘렸을 때의 성장 효과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평균 5%로 성장하는 어떤 중위소득국가에서 고소득국가와의 상품 수입 비중이 매년 10% 상승하였다면 이로 인한 성장 효과는 약 0.076%p가 된다.⁵³⁾ 즉 고소득국가들로부터 상품 수입 비중을 10% 확대한 것만으로도 매년 약 0.076%p의 소득성장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전체 국가와의 수입 비중이 매년 10% 상승하였다면 이때의 성장 효과는 매년 약 0.049%p에 그친다.⁵⁴⁾

지금까지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소득국가와 상품 무역을 확대하거나 상품 수입을 늘릴 때의 성장 효과는 전체 국가와 상품 무역을 확대하거나 상품 수입을 늘릴 때의 성장 효과보다 더 높다. 둘째, 중위소득국가의 경우 이러한 성장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무역확대와 생산성(TFP) 성장률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 앞 장의 식 (1)을 통해 계산한 TFP를 식 (6)의 좌변에 넣어 생산성 성장률이 종속변수가 되도록 하였다. [표 4-3]은 회귀분석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의 (1)열과 (3)열을 통해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한 무역 비중이 높아 지거나 수입 비중이 늘어날 경우, 생산성 상승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의 (2)열과 (4)열을 통해 이러한 생산성 제고 효과는 러시아가 포함된 중위 소득국가들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표의 (1)열과

53) t 시점의 연평균 성장률 $g_{y,t}$ 는 $g_{y,t} = (y_t/y_{t-1})^{1/\Delta t}$ 이므로 $\ln g_{y,t} = (\ln y_t - \ln y_{t-1})/\Delta t$ 의 관계가 성립하며 이는 $g_{y,t} = \exp[(\ln y_t - \ln y_{t-1})/\Delta t]$ 를 의미한다. 따라서 매년 무역 비중이 $\Delta \overline{trade}_{t-1}$ 만큼 상승하였을 때 식 (6)을 활용하여 성장 효과 $\Delta g_{y,t}$ 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g_{y,t}(1 + \Delta g_{y,t})]/g_{y,t} = \exp[(\hat{\gamma} \times \Delta t \times \Delta \overline{trade}_{t-1})/\Delta t]$$

이는 $\Delta g_{y,t} = \exp[(\hat{\gamma} \times \Delta t \times \Delta \overline{trade}_{t-1})/\Delta t] - 1$ 을 의미하므로 [표 4-2]의 (4)열을 통해 다음의 계산식을 얻게 된다:

$$\Delta g_{y,t} = \exp(0.00151 \times 10) - 1 \approx 0.0151$$

따라서 $g_{y,t} = 5\%$ 라면 상품수입 비중 증가로 인한 성장률 상승분은 $0.0151 \times 5\% = 0.076\%$ 가 된다.

54) $\Delta g_{y,t} = \exp(0.000981 \times 10) - 1 \approx 0.0098$ 이므로 $g_{y,t} = 5\%$ 라면 수입 비중 증가로 인한 성장률 상승치는 $0.0098 \times 5\% = 0.049\%$ 가 된다.

표 4-3. 무역과 TFP 성장의 관계(전체 국가와의 무역)

VARIABLES	(1)	(2)	(3)	(4)
	Full Sample	Mid Income Only	Full Sample	Mid Income Only
	TFP Growth	TFP Growth	TFP Growth	TFP Growth
Exports+Imports (% of GDP)	3.74e-05* (2.26e-05)	7.17e-05** (2.91e-05)		
Imports (% of GDP)			7.77e-05* (4.12e-05)	0.000128** (5.24e-05)
Initial TFP (logged)	0.826*** (0.0591)	0.854*** (0.0619)	0.830*** (0.0582)	0.848*** (0.0611)
Initial income (logged)	0.00892* (0.00480)	0.00464 (0.00546)	0.00883* (0.00470)	0.00540 (0.00535)
Population growth (%)	-0.00929 (0.161)	-0.446** (0.198)	-0.0161 (0.159)	-0.413** (0.196)
Initial human capital	-0.000447 (0.00484)	-0.00155 (0.00518)	-0.000510 (0.00475)	-0.00204 (0.00525)
Average investment rate (% of GDP)	0.000615*** (0.000199)	0.000365** (0.000142)	0.000596*** (0.000195)	0.000368** (0.000143)
Observations	942	440	942	440
Number of id	134	72	134	72
# of instruments	44	44	44	44
2nd-order autocorr (pval)	0.412	0.630	0.411	0.640
Hansen test (pval)	0.360	0.603	0.370	0.592

주: 1) (1)-(4)의 종속변수는 t 시점의 TFP이며 'Initial TFP(logged)'의 계수는 식 (6)의 $\theta + 1$ 임. 따라서 추정계수가 1보다 작다면 초기 TFP가 높을수록 생산성성장률은 낮아짐을 의미함.

2) 괄호 안은 이분산에 강건한(robust) 표준오차를 나타냄(*** $p < 0.01$, ** $p < 0.05$, * $p < 0.1$).

자료: PWT 9.0, WDI(온라인 자료, 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3. 14).

(2)열, 그리고 (3)열과 (4)열의 비교를 통해 중위소득국가들이 얻는 생산성 성장 효과는 전체 국가들의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보았던 무역확대의 경제성장 효과와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고소득국가와의 상품 무역이 늘어났을 때 생산성 성장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표 4-4]에 있는 (1)~(4)열의 비교를 통해 지금까지 얻은 것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고소득국가와 상품 무역을 확대하거나 고소득국가로부터 상품 수입 비중을 늘릴 경우 생산성

성장의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중위소득국가에서 더욱 높게 나타나고 그 인과관계 역시 더 강해진다. 둘째, 고소득국가와의 상품 무역을 늘리거나 그들로부터 상품 수입을 늘릴 경우 얻게 되는 생산성 성장 효과는 전체 국가와의 상품 무역을 늘리거나 상품 수입을 늘렸을 때보다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특성은 중위소득국가들에만 한정해도 여전히 유효하다. 마지막으로 [표 4-3]과 [표 4-4]의 비교를 통해서 고소득국가와 상품 무역을 확대하거나 그들로부터 상품 수입을 늘릴 경우 얻게 되는 생산성 상승의 효과가 전체 국가와 무역을 확대하거나 그들로부터 수입을 늘릴 경우 얻는 생산성 상승 효과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중위소득국가의 TFP가 연평균 5%로 성장한다고 가정하면, 고소득국가로부터의 상품 수입 비중이 매년 10% 상승할 때 매년 약 0.01%p의 TFP성장 효과가 발생한다.⁵⁵⁾ 이에 반해 전체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매년 10% 상승할 때의 TFP 성장 효과는 매년 약 0.006%p에 그친다.⁵⁶⁾

본 절에서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Δ 전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총교역량 증가 Δ 전체 국가들로부터의 수입 비중 확대 Δ 고소득국가들과의 상품 무역확대 Δ 고소득국가들로부터의 상품 수입 비중 확대는 경제성장 및 생산성 성장에 도움이 된다. 둘째, 이러한 성장 효과는 중위소득국가들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셋째, 전체 국가들을 대상으로 총교역량을 늘리거나 그들로부터 수입을 늘릴 때의 성장 효과보다 고소득국가들과 상품 무역량을 늘리거나 그들로부터 상품 수입을 확대할 때의 성장 효과가 더 높다.

다음 절에서는 왜 고소득국가들과 상품 무역을 확대할 때 얻는 성장 효과가 전체 국가들과 무역을 확대할 때 얻는 성장 효과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지 파악하기 위해,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육성과 무역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실증 분석을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55) $\Delta g_{TFP,t} = \exp(0.0002 \times 10) - 1 \approx 0.002$ 이므로 $g_{TFP,t} = 5\%$ 라면 수입 비중 증가로 인한 성장률 상승치는 $0.002 \times 5\% = 0.010\%$ 가 된다.

56) $\Delta g_{TFP,t} = \exp(0.000128 \times 10) - 1 \approx 0.00128$ 이므로 $g_{TFP,t} = 5\%$ 라면 수입 비중 증가로 인한 성장률 상승치는 $0.00128 \times 5\% = 0.0064\%$ 가 된다.

표 4-4. 무역과 TFP 성장의 관계(고소득국가와의 상품 무역)

VARIABLES	(1)	(2)	(3)	(4)
	Full Sample	Mid Income Only	Full Sample	Mid Income Only
	TFP Growth	TFP Growth	TFP Growth	TFP Growth
Exports+Imports (% of GDP)	8.76e-05** (4.01e-05)	0.000133*** (4.85e-05)		
Imports (% of GDP)			0.000152** (7.20e-05)	0.000200*** (7.61e-05)
Initial TFP (logged)	0.871*** (0.0813)	0.894*** (0.0719)	0.826*** (0.0584)	0.866*** (0.0573)
Initial income (logged)	0.00449 (0.00632)	0.00244 (0.00616)	0.00897* (0.00484)	0.00425 (0.00529)
Population growth (%)	-0.116 (0.169)	-0.550*** (0.170)	-0.0532 (0.133)	-0.497*** (0.173)
Initial human capital	0.00208 (0.00528)	-0.00147 (0.00527)	-0.00285 (0.00489)	-0.00274 (0.00513)
Average investment rate (% of GDP)	0.000563*** (0.000215)	0.000325*** (0.000124)	0.000570*** (0.000194)	0.000332** (0.000131)
Observations	905	415	907	417
Number of id	135	72	135	72
# of instruments	44	44	78	44
2nd-order autocorr (pval)	0.100	0.143	0.336	0.566
Hansen test (pval)	0.266	0.643	0.187	0.595

주: 1) (1)-(4)의 종속변수는 t 시점의 TFP이며 'Initial TFP(logged)'의 계수는 식 (6)의 $\theta + 1$ 임. 따라서 추정계수가 1보다 작다면 초기 TFP가 높을수록 생산성성장률은 낮아짐을 의미함.

2) 괄호 안은 이분산에 강건한(robust) 표준오차를 나타냄(*** $p < 0.01$, ** $p < 0.05$, * $p < 0.1$).

자료: PWT 9.0, WDI(온라인 자료, 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3. 14).

3. 국제무역과 제조업 고도화의 관계

앞 절의 실증분석을 통해 무역확대는 경제성장 및 생산성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전체 국가와 무역을 확대하는 것보다 고소득국가와 상품 무역을 확대했을 때 이러한 성장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본 절에서는 고소득국가들과 상품 무역을 확대하였을 때 얻는 성장 효과가 전체 국가와 무역을 확대하였을 때 얻는 성장 효과보다 왜 더 높아지는지 파악하기 위해 중·고부가가치 제조업과 무역, 그중에서도 수입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분석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앞 장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수출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소득국가들로부터의 상품 수입 비중을 늘릴 경우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상품 수입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앞의 선행연구 요약에서 이미 정리한 것처럼 국내의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부문에서는 △ 시장 경쟁 심화 △ 규모의 경제 실현 △ 고품질 중간재의 다양화·저렴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곧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부문의 기업 생산성 상승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소득국가들과 상품 무역을 확대하는 경우 국내의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이 촉진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에서 기술 혁신 및 새로운 지식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므로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생산 비중이 높아질수록 소득 및 생산성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바로 앞 절에서 전체 국가로부터 수입 비중을 늘릴 때보다 고소득국가들로부터 상품 수입 비중을 늘릴 때 성장 효과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무역의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발전 촉진 효과는 고소득국가들로부터 상품 수입 비중을 늘릴 때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요약하면 다음의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1: 수입 비중 확대는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을 촉진한다.

가설 2: 고소득국가들로부터 상품 수입 비중을 확대할 때의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 효과는 전체 국가로부터 수입 비중을 확대할 때의 제조업 육성 효과보다 더 크다.

본 절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위의 가설을 입증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고소득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났을 때 발생하는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 효과가 전체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늘었을 때 얻어지는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 효과보다 더욱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분석을 위해 다음의 고정효과 모형을 고려해보자:

$$s_{i,t} = \beta X_{i,t} + \delta \log y_{i,t-1} + \gamma import_{i,t} + u_i + D_t + \varepsilon_{i,t} \quad \dots \quad (7)$$

식 (7)의 $s_{i,t}$ 는 t 시점에서 국가 i 의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생산 비중을 나타낸다.⁵⁷⁾ 우변의 $X_{i,t}$ 는 중·고부가가치 제조업과 관련이 있는 설명변수들로서, △ 공업 부문(industry sector)의 고용률 △ 고정투자증가율 △ GDP 대비 정부투자 비중 △ 순해외직접투자 △ 금융시장 발전 지표 △ 정부효율성 · 재산권보호 · 부정부패 · 정치안정 등과 같은 각종 제도적 질에 대한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y_{i,t}$ 는 1인당 실질 GDP이며, $import_{i,t}$ 는 GDP 대비 수입 비중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u_i 와 D_t 는 각각 고정효과(fixed effect)와 시간 더미이다.

[표 4-5]는 회귀식 (7)을 통해 얻은 분석 결과로서 여기에서 $import_{i,t}$ 는 전체 국가로부터의 GDP 대비 수입 비중이다. 표의 (1)열을 보면 전체 국가로부터 수입 비중이 늘어날 경우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생산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열을 보면 중위소득국가들로 표본을 한정할 경우 이러한 제조업 육성 효과가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된다. 표의 (3)열과 (4)열은 중·고부가가치 제조업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각종 제도적 질의 지표들을 설명변수로 추가한 회귀 모형의 결과이다. 제도적 특성을 설명변수로 통제할 경우, 중위소득국가들의 경우에도 전체 국가로부터 수입을 늘릴 때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육성이 촉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7) 본문에는 수록하지 않았지만 $s_{i,t}$ 를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생산 비중이 아닌 제조업 일반의 생산 비중으로 하여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즉 고소득국가들로부터 수입을 늘렸을 때의 제조업 일반의 육성 효과가 전체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늘렸을 때보다 크게 나타난다.

표 4-5. 무역과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생산의 관계(전체 국가와의 무역)

	(1) Full Sample	(2) Mid Income Only	(3) Full Sample	(4) Mid Income Only
Import (% of GDP)	0.0175** (0.00846)	0.0210 (0.0131)	0.0239** (0.0109)	0.0255* (0.0149)
Employment rate in industry sector (%)	0.0447* (0.0231)	0.0766** (0.0375)	0.0572 (0.0367)	0.0371 (0.0506)
Financial development index	-0.373 (1.081)	-2.561 (1.897)	-0.0304 (1.048)	0.266 (1.842)
GDP per capita (lagged)	0.329 (0.411)	0.315 (0.556)	-0.534 (0.411)	-0.611 (0.581)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 of GDP)	-0.0344** (0.0137)	-0.0354 (0.0219)	-0.0307** (0.0130)	-0.0145 (0.0177)
Government expenditure (% of GDP)	-0.0440** (0.0214)	-0.0522* (0.0277)	-0.0854*** (0.0313)	-0.0847** (0.0364)
Net FDI inflow	0.00131 (0.00136)	-0.00285 (0.00988)	0.00350** (0.00137)	-0.0114 (0.00837)
Government effectiveness index			0.537* (0.286)	0.576 (0.402)
Corruption			-0.0520 (0.0925)	-0.00364 (0.171)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0.0423*** (0.0154)	0.0226 (0.0179)
Government stability			0.0634 (0.0389)	0.0743 (0.0624)
Political risks			-0.0290** (0.0144)	-0.0358 (0.0234)
Observations	2,820	1,475	1,721	891
R-squared	0.059	0.080	0.124	0.115
Number of id	133	73	111	60
Country FE	Yes	Yes	Yes	Yes
Year FE	Yes	Yes	Yes	Yes

주: 괄호 안은 이분산에 강건한(robust) 표준오차를 나타냄(*** p(0.01), ** p(0.05), * p(0.1).

자료: PWT 9.0, WDI, 'Financial development index'는 IMF, 'Government effectiveness index'는 WGI, 그리고 'Corruption,'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Government stability,' 'Political risks'는 ICRG로부터 가져옴(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3. 14).

마지막으로 [표 4-6]은 회귀식 (7)의 $import_{i,t}$ 에 고소득국가들로부터의 상품 수입 비중을 넣었을 때 회귀분석에서 얻은 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표 4-5]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소득국가들로부터 수입을 늘리면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생산 비중이 증가한다. 따라서 ‘가설 1’이 실증분석으로 입증된다.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표 4-6]의 (1)~(4)열과 [표 4-5]의 (1)~(4)열을 비교해보자. 그러면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고소득국가들로부터의 상품 수입 비중이 늘어났을 때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생산 비중의 증가치는 전체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늘었을 때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생산 비중 증가치보다 높게 나타난다. 둘째, 고소득국가들로부터의 상품 수입 증가와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 간의 인과관계는 전체 국가들로부터의 수입 증가와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 간의 인과관계보다 더욱 강하다.

정리하면 고소득국가들로부터의 상품 수입을 늘렸을 때 발생하는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 효과가 전체 국가로부터 수입을 늘렸을 때의 그것보다 양적 측면(추정계수의 크기)과 질적 측면(통계적 유의성) 모두 더 두드러진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 역시 실증분석을 통해 입증되는 것이다. 여기서 ‘가설 2’는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소득국가들로부터 상품 수입을 늘리는 것이 전체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더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산업구조의 다각화·선진화를 위해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이 시급한 러시아의 경우 그러한 산업에 경쟁력이 있는 고소득국가들과 상품 무역을 확대하여 국내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가설 2’가 갖는 이러한 경제적 함의는 더욱 각별하다고 말할 수 있다.

표 4-6. 무역과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생산의 관계(고소득국가와의 상품 무역)

	(1) Full Sample	(2) Mid Income Only	(3) Full Sample	(4) Mid Income Only
Import (% of GDP)	0.0342*** (0.0126)	0.0339* (0.0196)	0.0581*** (0.0140)	0.0458** (0.0207)
Employment rate in industry sector (%)	0.0400* (0.0225)	0.0700* (0.0380)	0.0374 (0.0343)	0.0202 (0.0475)
Financial development index	-0.215 (1.099)	-1.611 (2.048)	-0.392 (1.000)	0.224 (1.700)
GDP per capita (lagged)	0.147 (0.405)	-0.0328 (0.521)	-0.605 (0.404)	-0.850 (0.524)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 of GDP)	-0.0344*** (0.0129)	-0.0362* (0.0213)	-0.0284** (0.0117)	-0.0101 (0.0159)
Government expenditure (% of GDP)	-0.0458* (0.0235)	-0.0425 (0.0291)	-0.0846*** (0.0309)	-0.0738** (0.0364)
Net FDI inflow	0.00218 (0.00151)	-0.000745 (0.0101)	0.00358** (0.00144)	-0.00826 (0.00814)
Government effectiveness index			0.626** (0.272)	0.738* (0.376)
Corruption			-0.0341 (0.0956)	-0.0153 (0.173)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0.0435*** (0.0143)	0.0277 (0.0178)
Government stability			0.0432 (0.0342)	0.0559 (0.0573)
Political risks			-0.0249* (0.0144)	-0.0299 (0.0237)
Observations	2,765	1,426	1,711	881
R-squared	0.067	0.075	0.161	0.136
Number of id	133	73	111	60
Country FE	Yes	Yes	Yes	Yes
Year FE	Yes	Yes	Yes	Yes

주: 괄호 안은 이분산에 강건한(robust) 표준오차를 나타냄(*** p<0.01, ** p<0.05, * p<0.1).

자료: PWT 9.0, WDI, 'Financial development index'는 IMF, 'Government effectiveness index'는 WGI, 그리고 'Corruption,'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Government stability,' 'Political risks'는 ICRG로부터 가져옴(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3. 14).

1. 요약

2000년 이후 러시아 경제의 성장 국면은 2000~03년, 2004~07년, 그리고 2008~14년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⁵⁸⁾ 2004년 두 번째 성장 국면에 접어든 이후 생산성의 성장 기여도가 점점 낮아지는 대신 물적 자본축적의 성장 기여도는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중진국에 들어선 러시아로서는 자본축적이 주도하는 양적 성장이 아닌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질적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성의 성장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설명하는 두 가지 원인을 제시하였다. 첫째,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거나 자체적인 혁신이 이루어지는 제조업 부문, 그중에서도 기술 혁신 및 지식 개발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생산 비중이 좀처럼 확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제도 개혁처럼 창의적인 민간의 자발적인 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제고하는 기업 환경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인 신기술·지식의 수용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대변하는 ‘제도적 장벽’이라는 지표를 보면 이 지표가 두 번째 성장 국면이 시작되는 2004년부터 급속히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였듯 러시아의 장기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이 주도하는 질적 성

58) 앞의 각주에서 서술하였듯, 마지막 국면이 2014년으로 한정된 것은 가용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의 제2장 말미에 2015년 이후를 ‘제재 국면(sanction regime)’으로 정의하고 문헌 조사를 통한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장을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자본 투자에 의존하는 에너지 부문의 생산 비중을 줄이고 기술의 혁신과 새로운 지식 창출이 핵심이 되는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와 동시에 창의적인 민간의 자발적 경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제무역, 특히 고소득국가와의 상품 무역을 확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양한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때 러시아와 같은 중위소득국가가 고소득국가와 상품 무역을 확대하거나 고소득국가로부터 상품 수입을 늘릴 경우 생산성 성장이 더욱 촉진된다는 사실을 특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소득국가들로부터 상품 수입을 늘릴 경우, 국내의 중·고부가가치 산업 생산 비중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은 러시아와 한국의 상품 무역확대가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는 호혜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한국은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러시아와의 무역확대를 통해 무역구조 다변화를 꾀할 수 있고 러시아는 현재 직면한 산업구조 다각화·고도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한·러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본론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성장 측면에서 러시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생산성이다.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질적 성장이 요원한 시점에서 자본축적을 통한 양적 성장 패턴이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같이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 고소득국가와 상품까지 포함하는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는 △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 시장의 크기를 확대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게 하며 △ 고품질 중간재의 다양화·저렴화로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동시에 상품 무역확대를 통해 해외의 선진 기술 및 새로운 지식의 습득, 이전, 파급이 더욱 용이해지고, 이러한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조업 부문 경쟁력이 열악한 러시아가 자국의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넓게는 전체 경제 부문, 좁게는 제조업 부문의 시장을 안에서 걸어 잠그는 것은 현명한 성장전략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 고소득국가와 상품 무역을 할 경우 발생하는 생산성 측면의 여러 효익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과 러시아 간 상품 무역확대가 갖는 상호 호혜성을 관련 통상 교섭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호혜적 관점에서 한국 제조업 부문의 노하우, 기술, 지식의 일부 이전을 장려하여 러시아가 현재 처한 중차대한 성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필요가 있다. 우리로서는 수출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는 즉각적 이점도 있지만 보다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러시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을 때 이웃에 거대한 소비시장이 형성되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노력과 동시에 러시아의 중앙집권적 정치 시스템 및 독점적 산업구조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는 러시아 국영기업을 동반한 기업 간 실질적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2015년 입법된 「정부와 민간투자자 및 지자체와 민간투자자의 협력에 관한 법률」(2015. 7. 13., 223-FZ)을 활용한 협력방안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

러시아는 각종 제도적 장벽으로 인하여 시장진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의 시장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러시아의 경쟁정책과 시장진입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러 간 제도적 자문 및 협력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서방제재로 인해 한국의 대러시아 진출이 크게 위축되었는데, 서방제재 속에서 필요한 제도 구축 작업이 무엇이고 어떠한 경제

협력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제조업 상품화 부문의 기술 혁신이 필요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과 러시아 간 다채로운 기술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러시아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초과학 지식을 서로 교류할 수 있다면 제조업 상품화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술 연구, 기술인력 교류 등을 통해서 양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공동으로 발굴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서론에서 밝혔던 것과 같이 국가 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상호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협력의 토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생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협력 상대의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가 단순히 러시아 경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한국과 러시아 간 협력 증진을 통한 양국 관계 발전에도 작은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 박지원. 2016a. 「러시아 경제위기와 정부의 대응정책: 2008년과 2014년 경제위기의 비교분석」. 『러시아연구』, 29권 1호, pp. 1~28.
- _____. 2016b. 「신보호주의 국제환경과 러시아 수입대체화 전략」. KOTRA Global Strategy Report.
- 이재영, 민지영, 강부균. 2012. 「러시아 대선 이후 푸틴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pp. 4~10.
- 이재영, 이철원, 민지영. 2017.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7-01, pp. 24~28.
- 민지영. 2017. 「러시아 지방정부 재정악화 배경과 전망」. KIEP 동향회의 자료. (4월 14일)
- _____. 2018. 「러시아 연금개혁안 채택 배경과 전망」. KIEP 동향회의 자료. (11월 16일)
- 정민현. 2018. 「러시아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대한 경제적 평가」. KIEP 동향회의 자료. (8월 31일)
- 제성훈, 강부균, 민지영. 2015.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정책과 한·러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5-25, pp. 40~65.
- 한종만. 2012.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고르바초프에서 메드베데프까지」. 『유라시아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러시아 유라시아 연구시리즈 12/11.

[영문자료]

- Acemoglu, D. and J. Robinson. 2006. "Economic Backwardness in Political Perspectiv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0(1), 115-31.
- ACRA. 2018. "Changing Economic Policy is a Main Channel of Sanctions' Influence on the Russian Economy." pp. 1-11.
- Alvarez, F., F. Buera, and R. Lucas. 2017. "Idea Flows, Economic Growth, and Trade." Working Paper.

- Aizenman, J. and M. Spiegel. 2010. "Takeoffs."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14, 177-196.
- Aghion, P., P. Howitt, and D. Mayer-Foulkes. 2005. "The Effect of Financial Development on Convergence: Theory and Evidenc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0, 173-222.
- Alcala, F. and A. Ciccone. 2004. "Trade and Productivit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9(2), 613-46.
- Arellano, M. and S. Bond. 1991. "Some Tests of Specification for Panel Data: Monte Carlo Evidence and an Application to Employment Equations." *Review of Economic Studies*, 58(2), 277-97.
- Arellano, M. and O. Bover. 1995. "Another Look at the Instrumental Variable Estimation of Error-Components Models." *Journal of Econometrics*, 68(1), 29-51.
- Bai, J. and P. Perron. 1998. "Estimating and Testing Linear Models with Multiple Structural Change." *Econometrica*, 66, 47-78.
- _____. 2003. "Computation and Analysis of Multiple Structural Change Models."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18(1), 1-22.
- Basu, S. and D. Weil. 1998. "Appropriate Technology and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3(4), 1025-54.
- Benhabib, J. and M. Spiegel. 2005. "Human Capital and Technology Diffusion." Phillipe Aghion and Steven Durlauf ed. *Handbook of Economic Growth*. Edition 1, Vol. 1, Ch. 13, 935-66.
- Bloom, N., M. Draca, and J. V. Reenen. 2016. "Trade Induced Technical Change? The Impact of Chinese Imports on Innovation, IT and Productivity." *Review of Economic Studies*, 83(1), 87-117.
- Blundell, R. and S. Bond. 1998. "Initial Conditions and Moment Restrictions in Dynamic Panel Data Models." *Journal of Econometrics*, 87(2), 115-43.
- Broda, C. and D. E. Weinstein. 2006. "Globalization and the Gains From Variet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1(2), 541-85.
- Caselli, Francesco. 2005. "Accounting for Cross-Country Income Differences." Phillipe Aghion and Steven Durlauf ed. *Handbook of Economic Growth*. Edition 1, Vol. 1, Ch. 9, 679-741.
- Connolly, R. and P. Hanson. 2016. "Import Substitution and Economic

- Sovereignty in Russia.” Chatham House Research Paper, p. 11.
- Cooper, H.. 2009. “Russia’s Economic Performance and Polici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CRS Report for Congress, p. 9.
- Danilova, E. and M. Morozov. 2017. “The Macroprudential Policy Framework in Russia.” BIS Papers, No. 94, pp. 306-315.
- Desai, P.. 2005. “Russian Retrospectives on Reforms from Yeltsin to Putin.” pp. 87-106.
- Goldberg, P. K., A. K. Khandelwal, N. Pavcnik, and P. Topalova. 2010. “Imported Intermediate Inputs and Domestic Product Growth: Evidence from India.”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5(4), 1727-67.
- Granville, B. and S. Mallick. 2006. “Exchange rate shocks and monetary policy in Russia.” University of London. pp. 1-22.
- Hausmann, R., L. Pritchett, and D. Rodrick. 2005. “Growth Accelerations.” *Journal of Economic Growth*, 10, 303-29.
- Herrendorf, B., R. Rogerson, and A. Valentinyi. 2014. “Growth and Structural Transformation.” Phillipe Aghion and Steven Durlauf ed. *Handbook of Economic Growth*. Edition 2, Vol.2, Ch.6, 855-941.
- IMF. 2007. “Diagnosing Dutch Disease: Does Russia Have the Symptoms?” p. 5.
- _____. 2015. “Russian Federation 2015 Article IV Consultation – Press Release and Staff Report.” IMF Country Report No. 15/211, p. 5.
- Inklaar, R. and M. Timmer. 2013. “Capital, Labor and TFP in PWT8.0.” Working Paper.
- Ito. 2017. “Dutch disease and Russia.” *International Economics*, 151, pp. 66-70.
- Jerzmanowski, M.. 2006. “Empirics of Hills, Plateaus, Mountains and Plains: a Morkov-Switching Approach to Growth.”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81, 357-85.
- Kar, S., L. Pritchett, S. Raihan, and K. Sen. 2013. “Looking for a Break: Identifying Transitions in Growth Regimes.” *Journal of Macroeconomics*, 38, 151-66.
- Karen and Others. 2011. “Russian Politics Timeline 1999-2011.” *Havighurst Center for Russian and Post-Soviet Studies*. Miami

- University. pp. 8-36.
- Kerekes, M. 2011. "Analyzing Patterns of Economic Growth: A Production Frontier Approach." Working Paper.
- Kim, Dong-Hyeon. 2011. "Trade, Growth and Incom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20(5), 677-709.
- Kluge, Janis. 2019. "Mounting Pressure on Russia's Government Budget." SWP Research Paper, p. 14.
- Levine, R. and D. Renelt. 1992. "A Sensitivity Analysis of Cross-country Growth Regress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82(4), 942-63.
- Lee, H. Y., L. A. Ricci, and R. Rigobon. 2004. "Once Again, Is Openness Good for Growth?"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75(2), 451-72.
- Melitz, J.. 2003. "The Impact of Trade on Intra-Industry Reallocations and Aggregate Industry." *Econometrica*, 71(6), 1695-1725.
- Mironov, V and A. Petronevich. 2015. "Discovering the signs of Dutch disease in Russia." *Resources Policy*, 46, pp. 97-112.
- OECD. 2006. *Economic Surveys: Russian Federation 2006*, p. 38.
- Ponomarenko, A. and S. Vlasov. 2010. "Russian Fiscal Policy During the Financial Crisis." pp. 6-8.
- Rodriguez F. and D. Rodrik. 2001. "Trade Policy and Economic Growth: A Skeptic's Guide to the Cross-National Evidence." NBER Working Paper.
- Spilimbergo, A.. 2007. "Measuring the Performance of Fiscal Policy in Russia." *Emerging Markets Finance and Trade*. Vol. 43, No. 6, p. 26.
- Tolkachev, S. and A. Teplyakov. 2019. "Import Substitution in Russia." p. 547.
- Ullrich, K.. 2014. "Russia's "Dutch disease"." Economics in Brief, No. 43.
- UN Human Rights Council. 2017.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Negative Impact of Unilateral Coercive Measures on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on His Mission to the Russian Federation." A/HRC/36/44/Add.1, pp. 9-12.
- Verhoogen, E.. 2008. "Trade, Quality Upgrading, and Wage Inequality in the Mexican Manufacturing Sector."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3(2), 489-530.

- Voskoboynikov, I. 2017. "Sources of Long Run Economic Growth in Russia Before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Russian Journal of Economics*, 3, 348-65.
- Wacziarg, R. and K. H. Welch. 2008. "Trade Liberalization and Growth: New Evidence." *World Bank Economic Review*, 22(2), 187-231.
- Wang, Y. and P. Wang. 2015. "Barriers to Health and Poverty Trap." Working Paper.
- Wang, P., T. Wong, and C. Yip. 2018. "Institutional Barriers and World Income Disparities." *Review* No. 3,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 Waugh, M. E. and B. Ravikumar. 2016. "Measuring Openness to Trade."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72, 29-41.
- Yanikkaya, H.. 2003. "Trade Openness and Economic Growth: A Cross-Country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72(1), 57-89.

[노문자료]

- ЕВРОПЕ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 ОРГАНИЗАЦИИ ОБЪЕДИНЕННЫХ НАЦИЙ. 2013. "ОБЕСПЕЧЕН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Й СОПОСТАВИМОСТИ ОЦЕНОК БЕДНОСТИ: ОПЫТ И ПРОБЛЕМЫ." p. 4.
- HSE. 2018. "Во что нам обойдутся санкции." Комментарии о государстве и бизнесе. No. 151, pp. 2-3.

[온라인 및 Data 자료]

- 「러, 국영 가스·석유회사 합병 결정」. 2004. 『한겨레』. (9월 15일).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7100004/2004/09/007100004200409151803352.html>(검색일: 2019. 3. 20).
- 「(유코스 사태) ⑤ 푸틴, 유코스 '조준사격」. 2004. 『이데일리』. (7월 6일). <https://news.v.daum.net/v/20040706111744864>(검색일: 2019. 3. 20).
- 러시아 산업부. <http://minpromtorg.gov.ru/>(검색일: 2019. 3. 19, 3. 25).
- 러시아 재무부. <https://www.minfin.ru/>(검색일: 2019. 3. 18).
- 러시아 중앙은행. <http://www.cbr.ru/>(검색일: 2019. 3. 19, 3. 25).

- “Russia Arrests Rusnano Senior Official for Corruptionn.” 2017. *Asharq Al-Awsat*. (June 10). <https://eng-archive.aawsat.com/asharq-al-awsat-english/world-news/russia-arrests-rusnano-senior-official-Corruptionn>(검색일: 2019. 3. 25).
- “RUSSIA’S IMPORT SUBSTITUTON: IMPRESSIVE RESULTS BY CARROTS AND STICKS… AND A LITTLE MONEY (PART 2 TO AWARA STUDY ON RUSSIA’S ECONOMY 2014-2016, YEARS OF SANCTIONS WARFARE).” 2017. AWARA. (July 26). <https://www.awaragroup.com/blog/russia-s-import-substituton/>(검색일: 2019. 3. 25).
- BIS effective exchange rate(검색일: 2019. 3. 21).
- CEIC data(검색일: 2019. 3. 18~19).
- CEIC. OPEC spot crude oil price(검색일: 2019. 3. 14).
- Doing Business Data. <http://www.doingbusiness.org/en/data>(검색일: 2019. 3. 25).
- EBRD. Transition Indicators. <https://www.ebrd.com/what-we-do/economic-research-and-data/data/forecasts-macro-data-transition-indicators.html>(검색일: 2019. 3. 18).
- ICRG data(검색일: 2019. 3. 14).
- IHS Markit(검색일: 2019. 3. 21).
- IMF. WEO.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검색일: 2019. 3. 14, 3. 18).
- IMF Financial Statistics data(검색일: 2019. 3. 14).
- Moscow Exchange. 2017. “Russian Equity Market Key Trends.” p. 4. <http://fs.moex.com/files/16041>(검색일: 2019. 3. 20).
- OECD data. <https://data.oecd.org/lprdty/gdp-per-hour-worked.htm>(검색일: 2019. 3. 21).
- PWT 9.0 data(검색일: 2019. 3. 14).
- Russia Statistics Services. <http://www.gks.ru>(검색일: 2019. 3. 15).
- 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s://www.transparency.org/research/cpi>(검색일: 2019. 3. 18).
- WB WDI data(검색일: 2019. 3. 14, 3. 18).
- _____. WGI data(검색일: 2019. 3. 14).
- World Bank Data. GDP(Current USD).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검색일: 2019. 3. 20).

World Bank Development Indicators. <https://databank.worldbank.org/data/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검색일: 2019. 3. 19).

“В Госдуме видят перспективы дедолларизации экономики.” 2019. *Regnum*. (January 2). <https://regnum.ru/news/2546164.html>(검색일: 2019. 1. 14).

“Бюджетное правило 4.0.” 2017. *Kommersant*. (June 6). <https://www.kommersant.ru/doc/3318593>(검색일: 2019. 3. 25).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 2008. “N57-ФЗ “О порядке осуществления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в хозяйственные общества, имеющие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обороны страны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а.””

[인터뷰]

MEMO 세르게이 아폰체프(Sergey Afontsev) 박사 면담(2019. 3. 6, 러시아 모스크바).

Russian Economic Growth after 2000: Assessment and Suggestions

Minhyeon Jeong and Jiyoung Min

This paper investigates Russian economic growth after 2000. We first identify growth regimes of the Russian economy between 2000 and 2014 by using the break-point estimation. Russia's economic growth during the period turns out to have three different regimes, the first, second and third of which are 2000-03, 2004-07 and 2008-14, respectively. We notice through growth accounting that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henceforth) led growth during the first regime in terms of its contribution to growth. However, TFP's contribution to growth has diminished since the second regime, while capital accumulation has contributed to growth the most.

To figure out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findings from growth accounting, we take a careful look at critical economic events and policy changes that could affect TFP during the period. We find that there were extensive institutional reforms for efficient administration and taxation system in the first regime, which would promote TFP at large. On the contrary, the Russian government started to intervene resource allocations in the market especially by nationalizing large energy corporations in the second regime and Russian economy's reliance on the energy sector has increased, both of which would undermine TFP growth.

Actually, we find that the production and export shares of mid- and

high-tech manufacturing in the Russian economy begun to shrink from the second regime, while the export share of fuel increased rapidly. Related to this, we measure institutional barriers of Russia that prevent adoptions of technology and knowledge from foreign countries and found that the barriers are the smallest in the first regime while the largest in the second regime.

We then revisit the growth effects of trade to find befitting growth implications for the Russian economy. To address the endogeneity, we use the dynamic panel GMM method and confirm the positive growth effects of trade. Particularly, it boosts both income and TFP growth for a middle-income country such as Russia to increase goods import from high-income countries, which are stronger in mid- and high-tech manufacturing in overall. We also provide empirical evidence that more goods import from high-income countries fosters domestic mid- and high-tech manufacturing industries. These empirical findings indicate that the Russian economy can deal with the stagnation of TFP growth more effectively by expanding goods trade with high-income countries such as Korea.

정민현(鄭民鉉)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mjeong@kiep.go.kr)

저서 및 논문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사임과 카자흐스탄 정국 전망」, 세계경제 포커스 19-06
(공저, 2019)

「카자흐·우즈벡의 경제 현황 평가와 한·중앙아 신경제협력 방향」, 세계경제 포커스
19-08(공저, 2019) 외

민지영(閔智英)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위원

(現 E-mail: jymjin@kiep.go.kr)

저서 및 논문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전략』(공저, 2017)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공저, 2017) 외

KIEP 연구자료 발간자료 목록

- | | | |
|---------|-------|--|
| ■ 2019년 | 19-01 | 일본 임금정체의 요인분석과 정책시사점 / 정성춘·권혁욱 |
| | 19-02 | How to Position South Korea in a Dramatically Changing World / Danny Leipziger |
| | 19-03 | 2000년 이후 러시아 경제성장 요인 분석과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 / 정민현·민지영 |
| ■ 2018년 | 18-01 | 호주·뉴질랜드의 대아시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 라미령·신민금·신민이 |
| | 18-02 |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과 북한 경제 / 최장호·최유정 |
| | 18-03 | 중·미 간 경상수지 불균형과 위안화 환율의 관계 / 신태비·나수엽·박민숙 |
| | 18-04 | 중국 모바일 결제 플랫폼의 혁신 발전과 시사점: 알리바바 사례를 중심으로 / 이현태·서봉교·조고운 |
| | 18-05 | 중·EU 통상협안 분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이철원·나수엽·임유진 |
| | 18-06 |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 성과: 사업재편을 중심으로 / 김규관 |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8만원		4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기획성과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유효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개 인 회 원 <input type="checkbox"/>		
연 구 자 회 원 <input type="checkbox"/>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Russian Economic Growth after 2000: Assessment and Suggestions

Minhyeon Jeong and Jiyoung Min

러시아는 우리나라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다. 최근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이 개시되는 등 양국 간 경제협력 활성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본고는 2000년 이후 러시아 경제성장을 평가하고 지속성장을 위한 러시아 경제의 당면과제를 도출한다. 또한 상품을 포함한 한-러 경제협력 확대가 러시아 경제의 장기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의 상호 호혜성을 논증한다.



ISBN 978-89-322-2460-2
978-89-322-2064-2(세트)

정가 5,000원